

최근 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2017. 12.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동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는

2017. 4. 18.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공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미보고 시 등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17.10.19.)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7. 10. 19.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아울러, 잠수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정비 등 2017. 12. 28. 공포·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에 관한 상세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담아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1편 ○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1.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	3
2.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	6
3.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	16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20
5.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	27
6. 개정 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사업의 종류 정비 .....	30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 제도 신설 .....	41
8.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45
9.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49
10.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72

**제2편 ○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9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1.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	77
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개선 .....	80
3.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	87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 .....	90
5.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	92
6.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	96
7. 안전인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	102
8.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	105
9.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	109
10.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	112
1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	114



12. 건강진단결과표(서식) 용어 정비 .....	123
13.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	130
14. 행정처분기준 강화 .....	133
15.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 .....	138
16.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	144
17.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 .....	147

### 제3편 ○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206호 (2017.12. 28. 공포·시행)

1.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일괄 정비 .....	167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주지방법 구체화 .....	195
3.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기준 신설 .....	199
4.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	202
5.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 .....	205

## I. 대통령령 제28368호(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업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등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발주자로 하여금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임무, 선임방법 등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확대

(안 제33조의15제1항제7호·제8호 신설, 안 제33조의15제2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방법의 개선(안 별표 4의2)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정기관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총 매출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 단위를 달리하고 있어 같은 구간에서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1일 평균매출액에 10퍼센트의 과징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 II.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9호(2017. 10. 17. 공포, 10.19. 시행)

###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를 위한 도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의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야간 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

(안 제15조의4, 제19조의2, 제76조의3, 제80조의4 및 제126조의2 신설)

공단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대상 기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주에게 수준 높은 산업 안전·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장소 확대

(안 제30조제4항제9호라목 신설)

건설현장 등에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추가함.

●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완화

(안 제102조제2항 신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어 해당 지역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라도 특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별표 8)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실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이 이 법령에 따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

(안 별표 10, 별표 10의3 및 별표 12)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지정기관 등의 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0)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등으로 처분기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업무정지로 그 처분 기준을 통일함.

### Ⅲ.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206호(2017. 12. 28. 공포·시행)

#### ■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잠수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정비

(안 제522조제3호, 안 제536조의2 신설, 안 제545조 및 제547조)

잠수방법에 따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잠수작업의 유형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2명이 1조로 잠수하도록 하는 한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의 잠수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비상기체통,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을 위한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마련

(안 제566조, 안 제567조제2항 신설)

현재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명확화

(안 제605조제1호, 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황사 경보 발령지역 등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 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방법 개선(안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 신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제1편

#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 ■ 개정이유

- 고용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를 의무화하면서 공표 기준을 완화하여 공표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합의(환노위 '17.3.2 의결)

#### 【 법안소위 시 의결사항 】

❖ 연간 ①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②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공표하던 것을 각각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공표하도록 함

- 아울러,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은폐에 따른 불이익의 하나로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도 공표대상 사업장으로 할 필요

### ■ 개정내용

-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로
  - 기존의 ‘사망재해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을
  - ①‘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과 ②‘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나누고
  -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추가함

### ■ 기대효과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경각심 제고
-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을 공표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차단

## ■ 시행시기(부칙)

###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적용례) 영 제8조의4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u>	2. <u>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u>
<신 설>	2의2. <u>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u>

<신 설>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  
-----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2호의3 또는 제3호-----  
-----  
-----  
-----  
-----  
-----  
-----공표하여야 한다.

## 2

##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시행령 제8조의4, 제46조, 별표13, 시행규칙 제3조의4)

### ■ 개정이유

-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고용부장관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함(법 제9조의2)
  - 법의 위임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기준)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72조제4항제1호)
  -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과 그 금액을 정함
- (권한의 위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한 고용부장관의 도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필요(법 제9조의2제3항)

### ■ 개정내용

#### (1) 고용부장관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 공표 사업장을 정함에 있어 ①그 대상 사업장은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②산업재해 공표 기준은 사고사망 만인율로 함
  - (대상 사업장)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산업재해를 통합관리 하되,
    - 시행 1년 후에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 제349회 제1차환경노동소위(17.2.28.) 합의 내용
- ▲ 2018년 1월 1일 : 1,000명 이상 사업장
  - ▲ 2019년 1월 1일 : 500명 이상 사업장



## 【공표 대상 사업장 기준】

- 통합공표 취지상 **도급 비율, 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

구 분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전 체	0.49	0.53
건설업	0.84	1.58
제조업	0.62	0.55
서비스업	0.32	0.14
* 운수창고통신업	0.49	0.98
철도·도시철도운송업	0.21	0.70

- ※ • 건설업은 환산재해율을 통해 사실상 통합 통계 시행 중
  - 환산재해율은 도급인·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
  - 환산재해율은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가감점부여 기준 및 각종 지도·감독의 면제 또는 강화의 기준 등으로 활용됨
- 서비스업은 도급·수급 관계가 많지 않고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서비스업의 소속외 근로자 비중 : 약 10% 수준,  
제조업 : 24.4%, 운수업 : 22.7% (2016년 고용형태 공시결과 참고)
- 운수창고통신업 내 철도·도시철도운송업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 상존
  - 지하철 스크린도어 협착사고('15. 강남역, '16. 구의역, 김포공항역)
  - 운수창고통신업 내 다른 업종 : 재해율이 높으나 사업장외 교통사고 비중 높음  
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재해는 전체 재해의 약 34.5%를 차지함(사업장내 산재예방관리로 해결 어려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능력, 행정적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 500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선정
  - ※ 1,000명 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 수 : 138개  
500명 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 수 : 353개  
300명 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 수 : 772개  
(2016년 자료 기준)
  - \*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재해자 파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급인·수급인 산재 통합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시행 초기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킨 후, 점차적으로 대상 사업장을 확대
  -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 : ('18년) 산업재해 통합관리 → ('19년) 공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장 : ('19년) 산업재해 통합관리 → ('20년) 공표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요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상 사업장에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제출할 것을 매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함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급인의 자료 요구권)**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공표 기준)** 대상 사업장 중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공표 기준】**

- **산업재해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산재 은폐유인 발생,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누락 가능성 존재
- 또한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이 동일규모·업종의 평균 통합 산업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공표대상으로 한다면, ①동일규모·업종 내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 공표의 실효성 저하, ②제도 취지 상 동일규모·업종 간 비교를 통한 공표보다는 도급·수급 사업장 간 비교를 통해 공표하는 것이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책임을 강화하는데 도움
  - \* 대상 사업장 중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유리제조업, 도금업(철강), 섬유또는섬유제품 제조업(울)은 1개 사업장만 존재, 전자제품제조업(47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25개) 외의 업종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장이 많지 않음 (9개소 이하)
- 따라서 ①**산재 은폐 심화문제를 완화**하고, ②**소수의 사업장을 공표함으로써 공표의 효과를 증대**하며, ③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고사망재해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2)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도급인이 고용부장관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000만 원

### (3) 권한의 위임

- 고용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
- 정확한 통합 산업재해 공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타당

### ■ 기대효과

- 안전보건조치 불량 사업장 공표 시 수급업체의 재해도 포함하여 산정·공표함으로써,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다발 사업장 집중관리·감독 및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 ■ 시행시기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단계적 시행)
  - 시행령 제8조의4제3항(사업장의 공표 시기), 시행규칙 제3조의4(자료의 요청 등)의 개정규정
    - ▲ 1,000명 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 2019년 1월 1일 이후
    - ▲ 500명 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 2020년 1월 1일 이후
- (적용례) 영 제8조의4제3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 규칙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신·구조문 대비표

###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u>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u> 말한다.
	1. <u>제조업</u>
	2. <u>철도운송업</u>

<p>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p> <p>&lt;신 설&gt;</p> <p>1. (생략)</p> <p>2. ~ 44. (생략)</p> <p>② (생략)</p>	<p>3. 도시철도운송업</p> <p>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 ----- ----- ---</p> <p>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p> <p>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p> <p>2. ~ 4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개 정 안

[별표 1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 관련)

1. ~ 3. (생략)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1호		1,000	1,000	1,000

(2)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1항----- ----- ----- ----- --.
<신 설>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신 설><신 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  
-----  
-----  
-----  
-----  
----- 별지 제1호의2  
서식-----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7.10.19>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제1쪽)

### I.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④ 근로자 수	⑤ 재해 현황				⑥ 업종
						사고 사망 자수	질병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망 포함)	질병 재해 자수 (사망 포함)	

### II. 수급인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⑧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⑨ 근로자 수	⑩ 재해 현황			
						사고 사망 자수	질병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망 포함)	질병 재해 자수 (사망 포함)
⑪합계	총 (       ) 개소				명	명	명	명	명

### III.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명	명	명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제2쪽)

## 작성방법

## I. 도급인 사업장 정보

- ① 사업장명 :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④ 근로자수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⑤ 재해현황 :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사고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질병사망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수를 의미
  - 질병재해자수(사망 포함)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 ⑥ 업종 : 통계청(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 II. 수급 사업장 정보

- ⑦ 사업장명 :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번호를 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⑨ 근로자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당해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수×근로일수) + (근로자수×근로일수) + ..... + (근로자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times 10) + (20 \times 20) + (5 \times 30) = 650(\text{일} \cdot \text{명}) / 365(\text{일}) = 2\text{명}(\text{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 ⑩ 재해현황  
 ○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 질병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 ⑪ 합계 :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III.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④(도급인 근로자 수)+⑩(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⑩(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 ⑥(도급인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⑩(수급인 사고재해자수 합계+질병재해자수 합계)
-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⑬(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⑭(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 3

##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시행령 별표 6)

### ■ 개정이유

-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06년 이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
  - \*('06) 6,233명, 60.9% → ('10) 5,502명, 70.5% → ('15) 5,213명, 65.8%
- 이와 관련, '0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에 인간공학기술사 등의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꾸준히 전문인력을 배출\*해오고 있으나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임
  - \*'05년~'16년까지 총 1,171명의 인간공학기사·기술사 배출
- 반면에, 보건관리자 자격 중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99.6.8.시행)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 그동안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을 인정해 왔으나
    -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관련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는 24명으로 전체 3,650명 중 0.7%를 차지함
  - 관련 학과목 수료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기에 한계

### ■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 6)

- (신설)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 (삭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을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 (명칭변경) 그 밖에 자격종목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하여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를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함

## ■ 기대효과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보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봄

## ■ 신·구조문 대비표(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p>[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 18조 관련)</p> <p>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3. (생 략)</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산업위생관리기사</u> 또는 <u>환경관리기사</u>(<u>대기 분야만 해당한다</u>)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u> 또는 <u>환경관리산업기사</u>(<u>대기 분야만 해당한다</u>)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6. 「고등교육법」에 따른 <u>전문대학</u></p>	<p>[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 18조 관련)</p> <p>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u> 또는 <u>대기환경산업기사</u>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인간공학기사</u>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6. ----- <u>전문대학</u></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상의 학교에서 ----- 분야 의 학과를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삭 제>

[별표 6]

###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7. <삭 제>

## 참고 주요 현황

## ■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 ● 자격별

- 간호사 선임 비율(2,626명, 71.9%)이 제일 높으며, 대기환경기사는 546명(15%), 과목 이수자는 24명(0.7%)이 선임('16.12월)

전체	간호사	대기	위생	의사	과목 이수	관련 학과졸	기타
3,650명 (100%)	2,626명 (71.9%)	546명 (15%)	336명 (9.2%)	62명 (1.7%)	24명 (0.7%)	19명 (0.5%)	37명 (1%)

## ● 년도별

자격	전체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간호	2,626명	754명	174명	221명	455명	486명	536명
대기	546명	262명	37명	36명	63명	75명	73명
위생	336명	116명	19명	37명	62명	58명	44명
의사	62명	28명	3명	1명	11명	11명	8명
과목이수	24명	12명	1명	2명	3명	2명	4명
학과졸	19명	8명	1명	0명	6명	3명	1명

## ■ 활용 가능한 다른 직종의 인력 현황

## ● 간호사 및 산업위생기사(산업기사)의 유희인력

- (간호사) 전체 등록 간호사 307,79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실제 활동 간호사는 134,748명이며, **173,049명이 유희인력임**
- (산업위생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12,299명 중 2,702명이 사업장, 산업 보건기관 등에 고용되어 활동 중이며 **유희인력은 9,597명임**

\*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종욱, 2015년)

## ● 간호사 및 산업위생기사(산업기사)의 연도별 신규 배출 규모

- (간호사) 연간 1.5만여명, 산업전문간호사 연간 120여명 배출
- (산업위생) ('13) 767명 → ('14) 800명 → ('15) 1,427명 → ('16) 1,104명

\* 연도별 신규 합격자 배출인원임



##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3)

### ■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전기, 정보통신과 그 밖의 공사부분을 다수의 수급인(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 각각의 수급인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 시공사의 공사 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법 제18조의2)
-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건설공사를 주로 발주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정자 제도도입 및 선임대상 논의(발주자 안전관리 의무마련 및 책임강화 연구용역, '15.6월)

### ■ 개정내용

-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규모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 \* 전체 건설공사 현장은 333,201개소이며, 이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은 13,938개소로 전체 공사현장의 4.2% (16.12월 기준)
- 전반적인 산업재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 건설업 사고사망자 : ('14) 434명(992) → ('15) 437명(955) → ('16) 499명(969)
  -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재해율 및 사망사고 만인율이 현저히 높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방지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

##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연도별 추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체	재해율(%)	0.59	0.59	0.53	0.50	0.49
	사고사망만인율(‰)	0.73	0.71	0.58	0.53	0.53
건설업	재해율(%)	0.84	0.92	0.73	0.75	0.84
	사고사망만인율(‰)	1.65	2.01	1.34	1.30	1.58

- 따라서,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최소 기준인 50억원 이상 공사로 함이 적정하며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규모: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 이를 '16년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율(30%) 및 건설업 월평균 임금(2,673천원)\*을 고려하여 건설업 공사 규모에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50명은 총 건설공사 금액 약 50억원에 해당함(46.8억원)

\* '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 (2) 안전보건조정자 수 : 1명

- 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가 분리발주로 인한 도급인 간의 공사일정 및 작업 순서의 조정이며
- 다수의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경우 오히려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 일관된 의사전달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 순서 등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조정자는 1명을 두는 것이 타당함

## (3)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 ②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건축법 제25조제1항제15호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 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④ 법 제52조의2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조정자는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일정한 현장경력을 갖춘 자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마련 및 책임강화에 관한 연구, 충북대, '15.6월)을 감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중급기술자 준용하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 소속된 자로 선임할 수 없음

#### (4)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①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 ②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③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④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의 확인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통보**

- 발주자는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각각의 분리발주 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사실의 고용부장관에 선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의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함

**■ 기대효과**

- 대형 공사현장에서 일반화된 분리발주 공사로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되어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기여

**■ 해외사례**

- 독일 조정자(Coordinator) 제도
  - 건설현장에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발주자는 조정자(Coordinator)를 선임하여 시공 계획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토록 하는 규정을 운영
  - <건설공사현장 법령(Baustell V)제3조(조정)>

**내 용**

- (1)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제4조에 의거하여 임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 시공계획 수립시 조정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조치를 조정한다.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시킨다.
  3.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및 추후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건축설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총괄한다.
- (3) 건설공사 기간동안 조정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법 제4조에 의거한 일반 기본원칙의 적용을 조정한다.
  2. 근로자와 관계없이 발주자 및 시공자가 이 법령에 의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3. 건축계획 시행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시킨다.
  4. 사업주들 간의 공동작업을 조직한다.
  5. 사업주가 작업절차를 규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조정한다.

■ 시행시기 (부칙)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p>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시행령 제29조제3항)

### ■ 개정이유

-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확대**
  - 법 제29조제5항에서 화학물질 제조 등을 하는 설비의 개조 등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규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작업 대상을 정할 필요

### ■ 개정내용

- 법 제29조제5항에서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 ①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정함

### ■ 기대효과

- 도급인에게 질식이나 붕괴 우려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도 수급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특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질식 : 일반재해자의 사망비율은 1.2%, 최근 5년간('10~'14년) 질식재해자의 사망비율은 50.6%
  - ▲ 붕괴 : 건설업은 최근 5년간('11~'15년) 사고 1건당 재해자수가 평균 1.01명, 붕괴사고는 1건당 평균사망자는 3.2명(다수 사상자 발생비율이 높음)

##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②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 ----- ----- ----- ----- ----- ----- ----- - 설비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	④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u>지는 작업으로 한다.</u>	<u>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u> <u>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u> 2. <u>토사·건축물·인공구조물 등의</u> <u>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u> <u>루어지는 작업</u>
--------------------	--

## (2)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영 제26조 제3항에서 “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u> <u>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u> <u>함유한 제제</u> ”란 안전보건규칙 별 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 ----- “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u> <u>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u> <u>을 함유한 제제</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 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사업의 종류 정비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별표1, 1의2, 3, 5)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1.13)에 따른 보완

### ■ 현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법 제3조제1항)
  -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시행령 제2조제1항)
- 시행령은 적용 범위(별표1), 관리책임자(별표1의2), 안전관리자(별표3), 보건관리자(별표5)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을 “원유 정제처리업 및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등 7개 화학업의 보유설비와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로 규정(시행령 제33조의6)

### ■ 문제점

- 표준산업분류가 개정\*('17.1.13, 7.1.시행)되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업 명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명칭과 달라 혼란 발생



구분	기 존	개 정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이외 임대업(69)</li> <li>음식·숙박업의 청소·수련시설운영업(551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에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이동</li> <li>중분류 코드 변경(76)</li> <li>청소·수련시설 운영업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85617)</li> </ul>
공정 안전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합비료 제조업(20202)”과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중 화학비료 제조와 관련된 업종”</li> <li>“농약제조업(20412)”과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204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으로 통합</li> <li>“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으로 통합</li> </ul>
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분류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38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으로 명칭 변경</li> </ul>
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중 “수도업(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분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이동</li> <li>대분류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변경</li> </ul>

- 한편,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 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의 적용제외 대상사업 개정 필요

#### ■ 개정내용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명으로 변경)

- (적용범위) ①부동산 이외의 임대업(69)은 대분류 I(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대분류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중분류 코드를 변경(76), ② 청소·수련시설 운영업이 대분류 I(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대분류 P(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
- ①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명으로 변경, ② 대분류명 변경으로 현행 법의 일부 적용 제외 사업의 종류를 그대로 유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임대업 ; 부동산 제외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청소·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 기존 세세분류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을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과 “금속류 원료재생업(38312)”으로 분류하고,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를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21)”과 “비금속류 원료재생업(38322)”으로 분류함에 따라,

- 기존 중분류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383)”을 “해체 및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으로 변경하여 현행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를 그대로 유지(별표1의2)

현 행		개 정 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① 기존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중 “수도업(36)”을 대분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이동하고, 중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으로 변경, ② 기존 대분류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변경, ③ 기존 중분류 “통신업”을 “우편 및 통신업”으로 변경

-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하여 현행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를 그대로 유지(별표3)

현 행		개 정 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업	⇨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통신업	⇨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수리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기존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을 “모피제품 제조업(14200)과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0),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14499)으로 세분함

-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하고 제외·한정조건을 보완(➡)하여 현행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를 그대로 유지(별표4의2)

현 행	개 정 안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 (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제18호에 해당하는 업은 제외한다)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통신업	⇨ 우편 및 통신업
수리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 수도업(36)이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대분류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명으로 변경(⇨)하고 제외·한정조건을 보완(➡)하여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의 종류를 그대로 유지(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현 행		개 정 안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 ① 기존 “복합비료 제조업(20202)”과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중 화학비료 제조와 관련된 업종을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으로 통합하고, ② 기존 “농약제조업(20412)”과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20411)”를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으로 통합함에 따라

- PSM 대상 업종명을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명으로 변경(⇒)하고 제외·한정조건을 보완(⇒)하여 현행 PSM 대상을 그대로 유지

현 행		개 정 안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항공법」 적용사업 중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관련 사업”을 제외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항공법」이 적용

- 기존 「항공법」 적용사업 중 항공 운항과 관련된 규정이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규정을 개정

\*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17.3.30. 시행)

## ■ 기대효과

-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정된 **표준산업분류명**으로 일치시켜 업종 판단에 혼동을 없도록 함

## ■ 시행시기

- 2017.7.1.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u>	3. <u>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u>
<신 설>	4. <u>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u>
<신 설>	5. <u>환경 정화 및 복원업</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 ----- -----

현행	개정안
<p>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4. <u>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5. <u>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6. <u>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u></p> <p>7. (생략)</p> <p>②·③ (생략)</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u></p> <p>5. <u>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6. <u>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u></p> <p>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별표 1]</b></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b>[별표 1]</b></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사업</p> <p>가. ~ 나. (생 략)</p> <p>다. 「<u>항공법</u>」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p> <p>라. (생 략)</p> <p>2. (생 략)</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가. ~ 다. (생 략)</p> <p>라. <u>소매업</u></p> <p>마. 삭제 &lt;2016.2.17.&gt;</p> <p>바. (생 략)</p> <p>사. (생 략)</p> <p>아. (생 략)</p> <p>자. 부동산업(<u>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u>) 및 임대업</p> <p>차. ~ 하. (생 략)</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하는 사업</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항공안전법</u>」----(----- ----- ----- -----) 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소매업; 자동차 제외</u></p> <p>마. (현행 바. 호와 같음)</p> <p>바. (현행 사. 호와 같음)</p> <p>사. (현행 아. 호와 같음)</p> <p>아. 부동산업(<u>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u>)</p> <p>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p> <p>차. ~ 하.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 서비스업	나. 교육 서비스업( <u>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u>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b>[별표 1의2]</b>	<b>[별표 1의2]</b>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u>	8. <u>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21. <u>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u>	21. <u>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u>
22. ~ 34. (생 략)	22. ~ 34. (현행과 같음)
<b>[별표 3]</b>	<b>[별표 3]</b>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u>	8. <u>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21. <u>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u>	21. <u>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u>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25. 전기, 가스, 증기 및 <u>수도사업</u>	25. 전기, 가스, 증기 및 <u>공기조절 공급업</u>
26. <u>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u>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6. <u>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u>
< 신 설 >	26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현 행	개 정 안
<p>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lt; 신 설 &gt;</p> <p>27. 운수업</p> <p>28. (생 략)</p> <p>29. 숙박 및 음식점업</p> <p>30. ~ 31. (생 략)</p> <p>32. <u>통신업</u></p> <p>33. <u>부동산업 및 임대업</u></p> <p>&lt; 신 설 &gt;</p> <p>&lt; 신 설 &gt;</p> <p>34. ~ 38. (생 략)</p> <p>39. <u>수리업</u>(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b>[별표 5]</b></p> <p>1. ~ 2. (생 략)</p> <p>3. <u>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u></p> <p>&lt; 신 설 &gt;</p> <p>&lt; 신 설 &gt;</p> <p>4. ~ 7. (생 략)</p> <p>8. <u>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u></p>	<p>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26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p> <p>27. 운수 및 <u>창고업</u></p> <p>28. (현행과 같음)</p> <p>29. 숙박 및 음식점업</p> <p>30. ~ 31. (현행과 같음)</p> <p>32. <u>우편 및 통신업</u></p> <p>33. <u>부동산업</u></p> <p>33의2. <u>임대업; 부동산 제외</u></p> <p>36의2. <u>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u></p> <p>34. ~ 38. (현행과 같음)</p> <p>39. <u>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u>(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b>[별표 5]</b></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모피제품 제조업</u></p> <p>3의2. <u>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u></p> <p>3의3. <u>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u></p> <p>4. ~ 7. (현행과 같음)</p> <p>8. <u>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p>

현 행	개 정 안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18. <u>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u>	18. <u>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u>
19. ~ 22. (생 략)	19. ~ 22. (현행과 같음)
23. 전기, 가스, 증기 및 <u>수도사업</u>	23. 전기, 가스, 증기 및 <u>공기조절 공 급업</u>
24. <u>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u>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4. <u>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u>
<u>&lt; 신 설 &gt;</u>	<u>24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u>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u>&lt; 신 설 &gt;</u>	<u>24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u>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u>창고업</u>
26. ~ 30. (생 략)	26. ~ 30. (현행과 같음)
31. <u>통신업</u>	31. <u>우편 및 통신업</u>
32. ~ 35. (생 략)	32. ~ 35. (현행과 같음)
<u>&lt; 신 설 &gt;</u>	35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6. ~ 37. (생 략)	36. ~ 37. (현행과 같음)
38. <u>수리업</u>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	38. <u>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u> (제19호 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1. (생 략)	41. (현행과 같음)

## 7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 제도 신설 (시행령 제33조의15)

### ■ 현행규정

- 고용부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위 지도사의 자격을 가짐(법 제52조의3)
  - 지도사 시험은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접형)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전 단계 합격자에 대한 유예 제도가 없음(시행령 제33조의14)

#### 【용어정의】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에 따라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한 자

#### [지도사 합격·등록 현황 및 연수교육 실시현황]

구분	지도사 시험 합격자 (‘96~’16)	지도사 등록자	연수교육 이수자 (‘15~’16)	’17년 연수교육 희망자
인원(명)	376	118	8	5

\* 합격자 현황 : (‘96) 169명 → (‘12) 58명 → (‘13) 7명 → (‘14) 77명 → (‘15) 24명 → (‘16) 41명

### ■ 문제점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은 별도의 면제제도가 없어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2차(논문형) 또는 3차(면접형)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야 하며,
  - 아울러, 지도사의 1차 시험은 각 지도사의 업무영역 구분과 관계없이 공통 과목으로 실시됨에도 기존 지도사가 다른 업무영역의 지도사 자격에 응시하려면 1차 시험부터 새로이 응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지도사는 각 업무영역별로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1차 시험은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공통필수 I·II·III의 과목 및 범위로 함에도 예를 들어, 전기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가 기계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응시수수료 발생 및 행정력 손실

- 이는 국가전문자격 중 전 단계 시험 유예, 동일자격 다른 분야 응시에 대한 시험일부 면제가 없는 유일한 시험으로 매년 이와 관련한 민원 다수 발생

## ■ 개정내용

- 1, 2차 시험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시행령 제33조의15제2항)
- 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공통필수 I·II·III 과목\*\*)을 면제하고,
  - \* ▲ 산업안전지도사 :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
  - ▲ 산업보건지도사 : 작업환경의학·산업보건 분야
  - \*\* ▲ 공통필수 I : 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 II : 산업안전일반, 산업위생 일반,
  - ▲ 공통필수 III : 기업지단·지도
-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공통필수 I·III 과목을 면제(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 ■ 기대효과

- 시험면제제도 신설 등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이 감소하고, 수험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제33조의15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법 제52조의3에 따라 2017년 시행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중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해당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참고 합격유예 관련 국가전문자격 현황

순번	자 격 명	시험시행			1차 시험 합격자의 다음회 1차면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1	가맹거래사	●	●		면제
2	감정평가사	●	●		면제
3	감정사	●	●		면제
4	검량사	●	●		면제
5	검수사	●	●		면제
6	경매사	●	●		면제
7	경비지도사	●	●		면제
8	경영지도사	●	●		면제
9	기술지도사	●	●		면제
10	공인노무사	●	●	●	면제(1,2차면제)
11	공인중개사	●	●		면제
12	관광통역안내사	●	●		면제
13	국내여행안내사	●	●		면제
14	관세사	●	●		면제
15	농산물품질관리사	●	●		면제
16	문화재수리기술자	●	●		면제
17	문화재수리기능자	●			1차만 시행
18	물류관리사	●			1차만 시행
19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			1차만 시행
20	변리사	●	●		면제
21	사회복지사1급	●			1차만 시행
22	산업안전지도사	●	●	●	-
23	산업보건지도사	●	●	●	-
24	세무사	●	●		면제
25	소방시설관리사	●	●		면제
26	소방안전교육사	●	●	●	면제(1,2차면제)
2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면제
28	주택관리사보	●	●		면제
29	청소년상담사	●	●		면제
30	청소년지도사	●	●		면제
31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		면제
32	행정사	●	●		면제
33	호텔경영사	●	●		면제
34	호텔관리사	●	●		면제
35	호텔서비스사	●	●		면제
36	수산물품질관리사	●	●		면제
37	손해평가사	●	●		면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7.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u>&lt;신설&gt;</u>	8.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u>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u>	<u>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u>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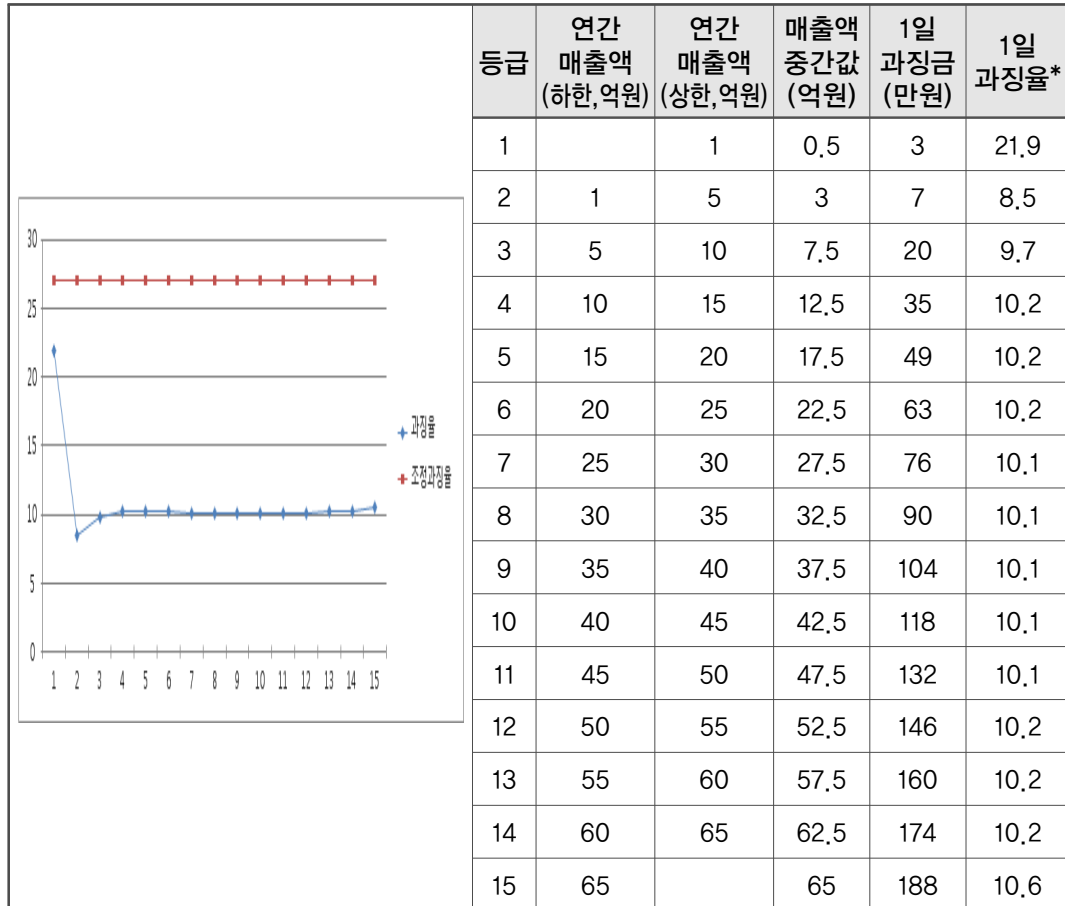
##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4의2)

## ■ 개정이유

- 고용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법령\*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음
  - \* ▲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의 수탁의 거부한 경우 ▲ 위탁받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러나, 해당 기관의 업무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음(법 제15조의3)
- 한편,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정하고 있음(별표 4의 2)
- 그런데,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구간별 매출액 간격에 비하여 1일당 과징금 금액의 간격이 매우 작음
  -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형평에 반하는 역차별 발생
  - \* 1일 과징율(%) = (1일 과징금 금액 ÷ 1일 매출액) × 100
  - 연간 총매출액 5천만원의 경우 : 1일당 과징금 금액 3만원 → 과징율 21.9%
  - 연간 총 매출액 3억원의 경우 : 1일당 과징금 금액은 7만원 → 과징율 8.5%
  - 또한,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적어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할 필요
  - \* 법제처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과징율 분석]



■ 개정내용

-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금액이 증가하되, 매출액 구간마다 과징율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이 아니라 1일 매출액에 동일한 과징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이 타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과징율 분석 결과 연간 총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3등급 이상은 과징율이 10% 수준으로 일정함



- 다만,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법제처, 2015년)에서 제시한 조정과징율 (27%)에 따라 조정함이 적정하나,

※ 조정과징율 = 매출영업이익률\* + 기준경비율\*\*

\* 매출영업이익률 : 해당 업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통계청 통계 참조)

\*\* 기준경비율 : 해당 업종의 매출액 대비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국세청「귀속 경비율 고시」)

- 일시에 위 조정과징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할 경우, 민간재해예방 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규제 저항이 우려
- 법정 과징금 한도액이 1억원으로 높지 않아, 조정과징율을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1일 평균 매출금액에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율(10%) 수준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 ■ 기대효과

-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금액의 형평성 제고

#### ■ 시행시기(부칙)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6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제2항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 2. 과징금의 산정방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0.1$$



##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시행령 별표 13)

### ■ 현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95개의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72조)
  - 시행령 별표에서 ①각각의 위반행위마다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기준을 3단계로 규정(개별기준)하고 일반기준에서 이와 별도로 ②「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감경\*을 두면서,
- \* 질서위반행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등급(1~3급)판정 받은 자, 미성년자(과태료 금액의 50%), 자진납부(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 ■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갖추어진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 규정은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감경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공사규모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두고 있음

- 나아가, 과태료 부과 처분시 법정형에 비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상당히 낮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 2, 3차 위반 시에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으로는 위험 방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 1차(300), 2차(400), 3차(500)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 미이행 : 1차(50), 2차(250), 3차(500)
    - ▲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 미이행 : 1차(50), 2차(250), 3차(500)
-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등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중요성이 이슈화
  - 그러나, 현행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태료 금액\*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비용이 더 높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20만원/50만원

## ■ 개정내용

-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 기준 축소)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의 취지와 다른 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의 감액 비율 등을 참고하여 부과비율은 그대로 두되, 사업장 규모만 한 단계 축소

###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규모에 따른 감경기준]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	부과 비율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해 발생 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중 3차 이상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3차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토록 기준 변경

① 동일 유형에 대한 부과 기준의 통일\*

-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을 기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수인성 제고

-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제18조제1항, 제72조제4항제3호)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은 경우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미선임의 경우 : 1·2·3차 각 500만원

■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제34조제7항, 제72조제5항제4호의2)

\* 고용부장관의 자료제출명령 위반의 경우

■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 제출명령 위반 : 1·2·3차 각 300만원(법 제40조제6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위반 : 1·2·3차 각 1,000만원(제41조제8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명령 위반 : 1·2·3차 각 1,000만원(제50조제2항)

② 국가의 검사·조사 업무 등을 방해한 경우

-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검사·점검·수거·요구 등 국가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 업무 등을 방해한 행위는 엄격하게 조치할 필요

- ㉢제49조제2항의 안전·보건진단 거부·방해·기피(제72조제2항)

■ (현행) 1차 150만원, 2차 750만원, 3차 1,500만원

- ㉣제51조제1항의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제72조제5항제12호)

■ (현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㉔ 제51조제3항의 공단의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72조제5항제12호의2)

■ (현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③ **별도의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조치할 필요

- ㉔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44조제3항, 제72조제4항제3호)

■ (현행)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④ **도급인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하여 수급인의 요청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3차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

- ㉔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제72조제3항제2호)

■ (현행)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 ㉔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제72조제3항제2호)

■ (현행)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등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정보를 확실 하게 제공함이 중요하므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필요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100만원/200만원/500만원) 상향  
(제41조제1항, 제72조제4항제2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200만원/50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 ×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 100만원/200만원/50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 × 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과실로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 10만원/20만원/5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 × 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20만원/5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 × 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기준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확보

## ■ 시행시기 및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별표 1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나.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팔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 100분의 70

##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	법 제72조제4항제1호		1,000	1,000	1,000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72조 제3항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전부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마.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41조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	30	150	300

		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바.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법령 규정에 반하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3	15	30
사.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00	500 400	500 500
아.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300	400	500
자.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00 500 300 500 300	500 400 500 4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차. 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 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72조 제5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500 500	500 500	500 500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카.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300	400	500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0	500	500
파.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0	500	500
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거.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법 제72조		50	25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제5항제3호				
러.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5	10	15
머.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50	300	500
버.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수급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 2) 수급인의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150 5	300 10	500 15
서.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50	300	500
어.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저.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처.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커.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터.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퍼.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허.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3호		200	250	300	
고.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노.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도.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로.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모.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법 제72조 제6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보.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4호의2		300	300	300
소.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	500	1,000
오.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조.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20	60	100
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대당)	5	25	50

코.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토.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300	600	1,000
포.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4호의3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호.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	1,000	1,500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구.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50	300	500
누.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5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두.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50	300	500
루. 법 제38조의5제1항을	법 제72조		100	200	300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항제6호			
무.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부.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7호	30	150	300
우.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30	150	300
주.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7호	300	300	300
추.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		
		100	200	500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10	2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00	200	500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쿠.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작업장당)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	20	50
투.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	법 제72조 제6항제8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5	10	20
		다)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푸.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변경하여 기재할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법 제72조 제6항제8호		10	20	50
후.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법 제72조 제6항제8호		5	10	15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 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 우(교육대상 근로자 1 명당)					
그. 법 제41조제8항을 위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 재사항 변경 명령을 위 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41조제11항을 위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에 적지 않은 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1)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 하는 자료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30	500 150	500 300
드. 법 제42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4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르. 법 제42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작업환경 측정 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 작업환경측 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5호의2		100	300	500
므. 법 제42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9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 300	120 300	300 300
브. 법 제42조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 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 지 않은 경우	제72조 제5항제5호		500	500	500
스. 법 제42조제3항을 위	법 제72조		100	300	500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5항 제5호의3				
우.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즈.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츠.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임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5호		500	500	500
크.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5	10	15
트.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9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프.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흐.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	법 제72조 제6항제2호		300	300	300

용한 경우						
기.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5	1,500 10	1,500 15	
니.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0	500	500	
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0 300 1,000 1,00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리.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0호		30	150	300	
미.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1호		30	150	300	
비.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시.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72조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1,500	1,500	1,500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안전·보건진단업무 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	제3항제3호	우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이. 법 제49조의2제1항 전 단을 위반하여 공정안 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300	600	1,000
지.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 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않거나 근로자대 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치.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 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 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	250	500
키.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 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 부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1호		30	150	300
티.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 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우(내용위반 1건당)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우(내용위반 1건당)	10 5	20 10	30 15
피.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립·시 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제출 명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	500 1,000	750 1,000	1,000 1,000

령을 위반한 경우					
히.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5	300 10	500 15
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6호		1,000	1,000	1,000
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2호		300	300	300
라.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500	300 500	500 500
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2호의2		300	300	300
바.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7호		50	250	500
샤.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4호		5	10	15



야.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50	300	500
자. 법 제52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차.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 당)	법 제72조 제6항 제13호	1)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 10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시행령 별표 13)

### ■ 개정이유

-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의 정비가 필요

\* <현행> 1,000만원 → <개정> (일반재해) 1,500만원 / (중대재해) 3,000만원

- 이와 관련, 현행 과태료 개별기준은 보고대상 산업재해에 대하여 미보고와 거짓 보고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정할 필요

\* 중대재해 :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시행규칙 제2조제1항)

### ■ 개정내용

-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3,000만원
-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1,500만원으로 하되,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현행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함

### ■ 기대효과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미보고가 근절되고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산재예방정책 수립이 가능

## ■ 시행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별표 1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 관련)

1. ~ 3. (생략)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72조 제3항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제2편

#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9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 개정이유

-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함(법 제12조)
  - 시행규칙 제10조는 안전·보건표지가 파손·변질되지 않도록 표지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물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
    - \*\*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
- 표지의 색채가 변색·탈색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색 재료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 \* ‘색채 고정원료’라는 표현이 낯설어 사업주에게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규제개혁위원회, ’16.10월)
- 또한, 제8조와 제9조에서 각각 색채와 제작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색채와 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별도로 두어 ‘법령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법제처)

### ■ 개정내용

- 다양한 채색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 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되,

- 색채의 색도\*가 별표3에서 정한 바\*\*대로 유지되도록 함

\* 빛깔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색상 및 채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

\*\*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의 표시방법을 규정

예)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빨간색의 색도기준은 7.5R 4/14

- 아울러, 제10조의 색채·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각각 제8조(표지의 색채) 및 제9조(표지의 제작)에 규정

#### ■ 기대효과

- 법령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쉽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 방지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u>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u> <u>&lt;신 설&gt;</u>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① <u>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u> ② <u>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가 별표 3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u>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



<p>③ (생 략) <u>&lt;신 설&gt;</u></p> <p>④ (생 략) <u>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u> <u>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u> <u>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u> <u>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u> <u>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u> <u>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u> <u>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u> <u>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로</u> <u>제작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lt;삭 제&gt;</u></p>
---	---

## 2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개선

(안 시행규칙 별표 6)

## ■ 현행규정

-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 (인력)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0,000명 이하인 경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 \*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6 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력을 추가
  - (시설·장비) 사무실과 소음측정기 등 작업환경관리 장비, 혈압계 등 건강관리 장비 및 비디오 영상 교육장비 등 보건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함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위탁 사업장의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함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 : 의사는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위탁사업장에 대해 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 122개소('17.6월 기준)

## ■ 문제점

- (인력)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수행 실태조사\* 결과, 현재 지정된 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 의사는 현행 업무수행 기준 준수를 위해 월 평균 11.2일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어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5년, 연세대학교)
  - ※ 의사 1인당 수탁한계를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수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 2회에서 4회 방문

- 또한, 사업장 방문 일에만 출근하는 비정규 계약직 및 고령의사의 채용을 선호\*하게 만들어 위탁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 저하 및 나아가 사업주로부터 동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

\* 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 의사의 1/3인 69명(32.6%)이 70대 이상

- (장비) 보건교육장비로 규정된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등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아가 PC, 빔 프로젝터 등 저렴한 교육장비가 보편화 되어 있어 보건교육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노트북 등의 교육장비는 누구나 쉽게 구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기준에서도 교육 장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표6)

- (인력)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명당
  - 수탁사업장 수를 100개소 → 150개소로,
  - 근로자 수를 10,000명 → 15,000명으로 확대
- (장비) 법적장비 규정에서 보건교육장비를 삭제

#### ■ 기대효과

- 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 의사의 보건관리 위탁업무 집중도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1) ~ 2) (생략)</p> <p>3) 장비기준</p> <p>가) (생략)</p> <p>나) 건강관리장비</p> <p>(1)~(2)(생략)</p> <p><u>다) 보건교육장비</u></p> <p><u>(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u></p> <p><u>(2)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u></p> <p>나. (생략)</p>	<p>[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장비기준</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건강관리장비</p> <p>(1)~(2)(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나. (현행과 같음)</p>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0,001~12,500	*7	*2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126~150	12,501~15,000	*8	*2	6	"	"	"
151~175	15,001~17,500	9	2	7	"	"	"
176~200	17,501~20,000	10	2	8	"	"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0,001~12,500	<u>6</u>	<u>1</u>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126~150	12,501~15,000	<u>7</u>	<u>1</u>	6	"	"	"
151~175	15,001~17,500	9	<u>*2</u>	7	"	"	"

201~225	20,001~22,500	*12	*3	9	"	"	"
226~250	22,501~25,000	*13	*3	10	"	"	"
251~275	25,001~27,500	14	3	11	"	"	"
276~300	27,501~30,000	15	3	12	"	"	"
301~325	30,001~32,500	*17	*4	13	"	"	"
326~350	32,501~35,000	*18	*4	14	"	"	"
351~375	35,001~37,500	19	4	15	"	"	"
376~400	37,501~40,000	20	4	16	"	"	"
401~425	40,001~42,500	*22	*5	17	"	"	"
426~450	42,501~45,000	*23	*5	18	"	"	"
451~475	45,001~47,500	24	5	19	"	"	"
476~500	47,501~50,000	25	5	20	"	"	"

## 비고

1. 사업장 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50,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 3. (생략)

176~200	17,501~20,000	10	*2	8	"	"	"
201~225	20,001~22,500	<u>11</u>	<u>2</u>	9	"	"	"
226~250	22,501~25,000	<u>12</u>	<u>2</u>	10	"	"	"
251~275	25,001~27,500	<u>13</u>	<u>2</u>	11	"	"	"
276~300	27,501~30,000	<u>14</u>	<u>2</u>	12	"	"	"
301~325	30,001~32,500	<u>16</u>	*3	13	"	"	"
326~350	32,501~35,000	<u>17</u>	*3	14	"	"	"
351~375	35,001~37,500	<u>18</u>	<u>3</u>	15	"	"	"
376~400	37,501~40,000	<u>19</u>	<u>3</u>	16	"	"	"
401~425	40,001~42,500	<u>20</u>	<u>3</u>	17	"	"	"
426~450	42,501~45,000	<u>21</u>	<u>3</u>	18	"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제20조 관련)

1.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가. 인력기준

- 1)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 2) 제2호가1)가)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기준 :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 제2호 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 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 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 (1) 분진·유기용제·특정 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 (2)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 (4) 흑구·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 (2) 혈압계

다) <삭 제>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0,001~12,500	<u>6</u>	<u>1</u>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126~150	12,501~15,000	<u>7</u>	<u>1</u>	6	"	"	"
151~175	15,001~17,500	9	<u>*2</u>	7	"	"	"
176~200	17,501~20,000	10	<u>*2</u>	8	"	"	"

201~225	20,001~22,500	<u>11</u>	<u>2</u>	9	"	"	"
226~250	22,501~25,000	<u>12</u>	<u>2</u>	10	"	"	"
251~275	25,001~27,500	<u>13</u>	<u>2</u>	11	"	"	"
276~300	27,501~30,000	<u>14</u>	<u>2</u>	12	"	"	"
301~325	30,001~32,500	<u>16</u>	<u>*3</u>	13	"	"	"
326~350	32,501~35,000	<u>17</u>	<u>*3</u>	14	"	"	"
351~375	35,001~37,500	<u>18</u>	<u>3</u>	15	"	"	"
376~400	37,501~40,000	<u>19</u>	<u>3</u>	16	"	"	"
401~425	40,001~42,500	<u>20</u>	<u>3</u>	17	"	"	"
426~450	42,501~45,000	<u>21</u>	<u>3</u>	18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3

##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 현행규정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9조제3항)
  -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17. 1. 2 개정으로 2개 장소 추가\*)
    - \*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 문제점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의 하나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를 규정하면서,
  - 해당 장소의 범위\*를 용접·용단작업 작업을 하는 ▲선박 내부 ▲특수화학 설비 ▲인화성물질 취급·저장 설비 용기에서의 장소로만 한정함(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제9호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한편, 건설현장 등에서는 용접·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단열재,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에 튀어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 서울 렉스나인 오피스텔 화재('16.3.28, 용접 중 화재, 사망 2명),  
김포 근생시설 화재('16.9.10, 고속절단 중 화재, 사망 5명) 등

- ‘불꽃으로 인한 가연물 화재’ 발생 장소는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제외  
되어 위 장소에서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

\*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 발생 : ▲동탄 메타  
폴리스 화재('17.2.4, 사망 2명) ▲부산 중학교 화재('17.2.12, 사망 1명)

- 따라서, 건설현장 등에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재발생 위험장소**’에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의 범위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함

#### ■ 개정내용

-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
- \*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 ■ 기대효과

- 도급인의 안전조치 이행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9.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u> <u>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u> <u>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u> <u>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u> <u>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u> <u>려가 있는 작업</u>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 (시행규칙 별표6의5)

### ■ 현행규정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시행규칙 별표6의5 제6호)
  -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후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별표6의5 제7호)

### ■ 문제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사업장 기술지도 실시 후 그 내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에 중복 작성해야 하는 부담

### ■ 개정내용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
  - 사업장 관리카드에 포함된 주요 항목\*들에 대해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동 보고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별지 제44호 서식 삭제)

\*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보호구 지급현황

### ■ 기대효과

- 규제 완화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p> <p>가. (생 략)</p> <p>나. <u>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별 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장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사진 등의 근거를 사업장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u></p> <p>다. (생 략)</p>	<p>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삭제</p> <p>나. (현행과 다와 같음)</p>
<p>7.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p> <p>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u>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u>, 그 밖에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p>	<p>7.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p> <p>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u>결과보고서</u>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p>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시행규칙 별표 8의2)

### ♣ 관계부처(안전처 등) 합동 「화재저감 종합대책」

#### ■ **현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에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 해당 작업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별표 8의2)

[별표 8의2]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접 흠,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li> <li>○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li> <li>○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li> <li>○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li> <li>○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li> <li>○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li> <li>○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 ■ 문제점

- 현행 규정은 ▲ **폭발위험이 있는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한 용접·용단작업** ▲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 ▲ **감전위험이 있는 습한 장소에서 용접작업만을 특별교육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용접 등 작업 중에는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는 대부분 용접·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가연성물질 등에 튀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 \* ▲ (용접·용단) 대우조선해양 화재('15.8.24, '15.11.10, 사망 각 2명), 서울 렉스나인 오피스텔 화재('16.3.28, 사망 2명) 등
  - ▲ (고속절단) 김포 근생시설 화재('16.9.10, 사망 5명) 등
- 최근 10년간('06년~'15년) 화재(157건)·폭발(235건)로 발생한 중대재해(403건)의 가장 큰 원인은 화기작업 시 불꽃(36.5%)
  - \* 화기작업(147건), 이상반응 등 공정사고(84건) 순, 기타 원인미상의 화재폭발 다수(110건)
- 특히,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 발생
  -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2.4, 사망 2명), 부산 중학교 화재('17.2.12, 사망 1명)
- 반면에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 중에는 중대재해는 없음('14~'16년)
-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 \* 화재위험작업 :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 ■ 개정내용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추가하고**
-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함

## ■ 기대효과

- 화재위험작업 전에 해당작업 위험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시행시기 및 부칙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개별내용> 1.~38 (생 략) (생 략)		<개별내용> 1.~3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9. (신 설)	○ (신 설)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 물의 사용·보관·설치 현 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 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참고 용접작업의 종류 등

### ■ 용접작업의 종류

- 용접이란 열과 압력을 가하여 금속을 직접 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열원을 기준으로 가스용접, 전기용접으로 구분
  - ※ 용단이란 금속 등의 모재를 녹여서 분리·절단시키는 것으로, 통상 가스장치를 사용

### ■ (현행 제2호)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 용접가스에 대한 위험

- 아세틸렌\* 용접·용단 :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용접 등에 사용
  - \*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서 탄소와 수소로 쉽게 분해하며 산소가 없어도 점화원이 있으면 분해 폭발을 일으킴(인화성 가스)
  - 현재는 아세틸렌이 저장된 용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나, 예전에는 칼슘카바이드 ( $\text{CaC}_2$ )에 물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
    - ※ 안전규칙은 아세틸렌가스 발생 과정에 필요한 조치(발생기실 설치장소·구조 등)를 주로 규정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가연성가스(산소, 아세틸렌 등) 용기를 다수 결합

### ■ (현행 제3호) 밀폐 또는 습한 장소 : 용접장소에 대한 위험

- 밀폐 장소 :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위험
  - 탱크 내부 등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장소에서는 용접봉\* 흠(fume), 보호가스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 용접부 산화방지용)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
    - \* 용접할 모재와 모재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모재를 연결시켜주는) 물질 → 용단 시에는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음
- 습한 장소 : 누전 등에 의한 감전 위험
  - ※ 용단작업 시에는 가스(산소+아세틸렌, 산소+LPG) 절단기를 주로 사용

## 6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시행규칙 별표 8)

### ■ 현행 규정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시행령 제148조제2항)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2)	
교육 종류	정기 교육	매분기 6시간	정기 교육	(일반분야) 매년 기본교육 3시간 + 직장교육 3시간 (방사선투과검사분야) 매년 기본교육 5시간 + 직장교육 5시간
	특별 교육	16시간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신규 교육	(일반분야) 기본교육 8시간 + 직장교육 4시간 (방사선투과검사분야) 기본교육 12시간 + 직장교육 6시간 ※ 최초 작업 종사 전 실시
교육 내용	<p>(정기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 사고, 직업병 예방 관련</li> <li>•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련</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p>(특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li> <li>• 방사선 측정기기 점검,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 취급 요령</li> <li>•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 방법</li> </ul>		<p>정기교육과 신규교육의 내용상 차이는 없으며, 교육내용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됨</p> <p>(기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li> <li>• 방사성물질등의 취급</li> <li>• 방사선장해방어</li> <li>• 방사선안전 관계법령</li> <li>•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li> </ul> <p>(직장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업체의 방사선 안전관리규정*</li> <li>•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li> <li>•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li> </ul> <p>* 안전관리규정 : ①방사선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②방사선 물질 등 취급, ③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등), ④종사자 안전관리, ⑤위험시 조치사항 등 규정</p>	

## ■ 문제점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약 4만명)

구 분	일반분야 종사자						방사선투과 검사자		총 계	
	산업		의료		교육연구		정기	신규	정기	신규
	정기	신규	정기	신규	정기	신규				
종사자수	20,180	4,380	3,720	390	6,100	1,480	5,500	1,250	35,500	7,500
소계	24,560		4,110		7,580		6,750		43,000	

-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중복하여 실시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 가중
- 「산업안전보건법」과 「원자력안전법」간에 교육시간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보건교육 상호인정 방안 논의 진행('16.7월)

## ■ 개정이유 (시행규칙 별표 8)

-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시간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교육시간 보다 14~18시간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여

\* ▲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교육(1년 24시간, 매분기6시간)  
▲ 원자력안전법의 정기교육(일반분야 6시간, 방사선투과검사분야 10시간)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특화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분기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교육방법) 원자력안전법 따른 정기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 기본교육은 원안위에서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이수,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기관에서 위탁 실시  
(교육내용)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종사자 안전관리, 위험시 조치 사항 등 안전관리규정, 그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교육과 「원자력안전법」의 신규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 법령이 상호 일부 인정\*하는 것은 가능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과 실시형태 및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상호 인정

\* (참고) 원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안

현 행	교육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개 정 안	(표 현행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작업 종사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기대효과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산안법과 원안법간 상호 인정함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부담 완화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u></p> <p>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p> <p>(표는 생략)</p> <p>비고</p> <p>1. ~ 2.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u></p> <p>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p> <p>(표는 현행과 같음)</p> <p>비고</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별표 8] 〈개정 2017. 00. 00.〉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 안전인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58조의3)

### ■ 현행규정

-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서면심사 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음(시행규칙 별표8의3)

### ■ 문제점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다른 제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등의 경우에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제32조의4, 제61조, 제74조의2, 제76조, 제77조의2, 제80조의3, 제96조, 제103조, 제128조

### ■ 개정이유 (시행규칙 제58조의3)

- 안전인증 신청인의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 기대효과

-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복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10호의 4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7.0.0〉

[ ] 예비심사 [ ] 서면심사  
[ ] 개별 제품심사 [ ]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신청서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예비심사 : 7일 서면심사 : 15일/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45일 개별 제품심사 :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60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제품현황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형식(규격)번호	용량(등급)	
신청부문	제품심사희망일		설치사업장명
	설치사업장 소재지		
	각종압력용기 개별제품심사 희망일	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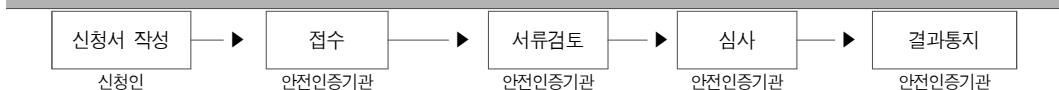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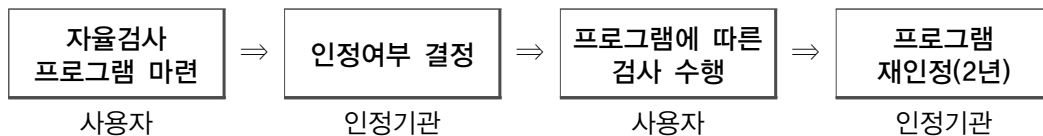
## 8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시행규칙 별표 10)

### ■ 현행규정

- 유해·위험 기계등의 성능에 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면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36조의2제1항)

\* 자율검사프로그램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절차)



- 사업주는 사업장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 자율 검사프로그램 검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지정검사기관에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36조의2제3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시행규칙 제74조)

- 지정검사기관은 사업장에서 정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해 프레스 등 12종의 기계 등에 대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위탁 현황 : 지정검사기관(총 21개)에 위탁한 사업장은 총 352개소로 프레스 등 자율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34,272대임('16년 기준)

### ■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 되었으나,
- 현행 규칙에서는 여전히 지정검사기관이 12종에 대해서만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업주의 불편

## ■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표 10)

- 지정검사기관이 컨베이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항목에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함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대상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국소 배기장치 ⑧원심기 ⑨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⑩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⑪롤러기 ⑫사출성형기	①~⑫ (좌 동)  ⑬고소작업대, ⑭컨베이어, ⑮산업용 로봇

## ■ 기대효과

-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업주에게 우수한 검사 기술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p> <p>1. ~ 2. (생략)</p> <p>3. 기계 분야(영 제28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유해·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p> <p>4. ~ 5. (생략)</p>	<p>[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p> <p>4. ~ 5. (현행과 같음)</p>

[별표 10] 〈개정 2017.0.0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5조 관련)

번호	구 분	인력기준	시설·장비기준
1	공통사항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책임자 1명</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설계·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사무실(장비실 포함)
2	종합지정 검사기관	<p>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5년 이상(산업기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전속도측정기</li> <li>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li> <li>와이어로프 테스터</li> <li>표준압력계</li> <li>소음측정기</li> <li>접지저항측정기</li> <li>진동측정기</li> <li>절연저항측정기</li> <li>정전기전하량측정기</li> <li>프레스급정지성능 측정기</li> <li>만능회로시험기</li> <li>수압시험기</li> <li>로드셀 또는 분동</li> <li>분진측정기</li> <li>풍속계</li> <li>피치, 틸트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li> <li>수준기</li> <li>검사용 공구세트</li> <li>라인스피드미터</li> </ol>

		<p>라. 고등학교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마.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바. 승강기기능사 면허를 가진 사람</p>	<p>20. 가스농도측정기</p> <p>21. 기밀시험장비</p> <p>22. 안전밸브시험기구</p> <p>23. 산업용 내시경</p> <p>24. 조도계</p> <p>25. 가스탐지기</p> <p>26. 초음파 두께측정기</p> <p>27. 스모크테스터</p> <p>28. 청음기 또는 청음봉</p> <p>29.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p> <p>30.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p> <p>31. 연소가스분석기</p> <p>32. 피토 튜브</p> <p>33. 수주 마노미터</p> <p>34. 출자</p>
3	기계 분야(영 제 28조의6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유해·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장비기준란의 제4호, 제12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다만, 비파괴시험장비 중 UT는 제외한다)
4	장치 및 설비 분야(영 제28조의6제1항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유해·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장비기준란의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및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5	국소배기장치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p>1. 스모크테스터</p> <p>2. 청음기 또는 청음봉</p> <p>3. 절연저항계</p> <p>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p> <p>5.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p> <p>6. 회전계(RPM측정기)</p>

9

##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시행규칙 부칙 신설)

### ■ 현행규정

- '16.8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17.10.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36조, 시행령 제28조의6)

### ■ 문제점

- '15년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보유대 수 추정 시 국토교통부 등록 자료\*(이동식 크레인 6,717대, 고소작업대 8,103대)와 그 이후 제조업체 출고 현황을 감안하여 각각 10,000대로 추정함
- '16년 8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초 대비 16,000대가 증가된 약 36,000대로 최종 파악됨
- \* 이동식 크레인 12천대(1만대 → 2만2천대), 고소작업대 4천대(1만대 → 1만 4천대)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보유대수 추정】

❖ 국토교통부 등록 자료를 차명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차명이 현대 5톤 트럭으로 기재된 차량이 향후 구조변경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변경한 차량에 대한 파악은 불가하였음

\* 크레인 카고 → 이동식크레인, 동해고소작업차 → 고소작업대

- 현재 안전검사기관이 검사 업무를 수행중이나, 예상보다 많은 검사물량과 처리 능력 부족\*으로 '17.10.31.까지 검사 완수가 불가능\*\* 차량이 발생될 실정이며,

\* 검사가능 대수(1개월) : 20일(1개월) × 3대(1일 검사가능) × 30개소(검사장수) = 1,800대

\*\* 총 36,341대 - 검사완료 774대 - 검사예정 12,600대(4.1~10.31) = 22,967대

- 이로 인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업주의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 발생이 예상됨

#### ■ 개정내용

- 안전검사 처리능력 부족에 따라 '17.10.31.까지 미수검 차량(22,967대)에 대하여 **현행 부칙 특례기한을 연장함**
- 다만, 특례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늦추려는 사업주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7.10.31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현행 기간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되,**
- 안전인증 제도\* 시행시점('09년)을 기준으로 **'09년 이전 차량은 '18.4.30까지, '09년 이후 차량은 '18.10.30까지로** 최초의 안전검사 기한을 단계별로 연장
- \* 제조·설치 단계에서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09.1.1. 시행)

#### ■ 기대효과

- **검사유예 기간의 단계별 연장을 통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을 **완화**하고,
- 검사물량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통해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p>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3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①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일(이하 “신규등록일”이라 한다)이 2015년 1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에 대한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0일 이전인 경우 : 2017년 10월 31일까지</li> <li>2.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18년 4월 30일까지</li> <li>3. 신규등록일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인 경우 : 2018년 10월 31일까지</li> </ol> <p>② (현행과 같음)</p>
---	---

## 10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시행규칙 제80조의8)

※ '17년 자체 규제개혁과제

### ■ 개정이유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8조의4제3항)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 및 제2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작업기간의 변경, ②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및 면적의 변경, ③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의 변경, ④현장책임자의 변경, ⑤작업근로자의 변경 등
  - ※ 변경신고서 처리실적 : ('14) 1,645건, ('15) 1,941건, ('16) 2,196건
- 그런데, 변경신고 사항 중 현장책임자 및 작업근로자의 단순 변경의 경우, 적합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기한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 민원인(석면해체·제거업자)은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이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

### ■ 개정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내용 중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
  - \* 유사 입법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서를 발급토록 규정

## 기대효과

-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석면해체·제거업자)의 불편 해소

#### 시행시기 (부칙)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 11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2항 신설)

### ■ 현행규정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부장관 지정기관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 건강진단의 종류, 주기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43조제1항, 제8항)
- '13년\*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화학적인자 163종, 분진 6종, 물리적인자 8종 외에 '야간작업 2종\*\*'을 추가함(시행규칙 별표 12의2제4호)
  - \* (단계적 시행) '14년 300명 이상 → '15년 50명 이상 → '16년 모든 사업장
  - \*\* ①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문제점

-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 도입('14.1.1.) 이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산업단지(제조업 밀집지역) 또는 수도권에 분포
  - \*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14) 170개소 → ('15) 192개소 → ('16) 221개소

## (특수건강진단기관 분포 현황)

구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221	34	67	40	23	27	30
(100)	(15.4)	(30.3)	(18.1)	(10.4)	(12.2)	(13.6)

※ 서울·경기·6개 광역시 소재 특검기관은 143개소로 전체의 64.7%를 차지

- 그러나, ‘야간작업’은 주로 건물관리업(경비), 숙박업, 운수업, 병원업 및 공공행정(경찰, 소방 등) 등에 많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업종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또는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음

## 【사 례】

- 강원지역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2개소(동해, 원주)로 태백, 영월, 춘천, 강릉 지역의 근로자들은 2~3시간 정도 이동하여 검진을 받음
- 제주지역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16년 신설(제주대병원)되었으나, 서귀포시의 근로자들은 50Km를 이동하거나 외부기관(광주, 서울 등)에서 한 달에 한번 출장을 오면 검진을 실시하는 상황

- 특히, 출장검진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원거리 이동 검진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 【사 례】

- “야간근로로 인해 밤새 일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특수검진을 받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2~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 “바로 옆에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먼 곳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게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맞느냐”

- 이에,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지 인근 검진기관에서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 개정내용 (시행규칙 제102조, 제103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경기도 관할 시는 제외)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되,
  - 일반검진기관의 검진의가 직업력·노출력 조사,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 기대효과

-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수검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전국 특검기관은 221개소인 반면, 일반건강검진기관은 5,527개소임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유효기간) ①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②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 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로 한다.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 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 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검진기본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별표 12의2제4 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 단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지정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 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수도권

<p>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p>	<p><u>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u></p> <p>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p> <p>2. <u>일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u></p> <p>3. <u>해당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u></p> <p>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lt;단서 삭제&gt;</p>
---	---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 4. (생략)

<신설>

1. -----  
-----  
-----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02조제2항제3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신 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3.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  
-----  
-----.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지정신청서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 지정검사기관      [ ] 안전인증기관      [ ] 안전검사기관  
 [ ] 특수건강진단기관      [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 종합진단기관  
 [ ] 안전진단기관      [ ] 보건진단기관      [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부속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와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102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및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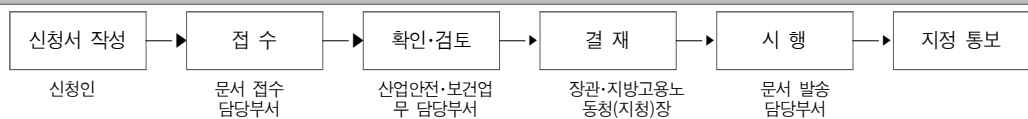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 특수건강진단 현황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연도별 수검 근로자 수]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집계중)
특수건강진단	1,410,355	1,722,384	1,851,25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368,107 (26.1)	784,549 (45.6)	923,600 (49.9)

[업종별 수검 근로자 수('15)]

(단위 : 명,%)

구 분	계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수검한 근로자수	784,549 (100)	208 (0.03)	226 (0.03)	412,608 (52.59)	10,013 (1.28)	2,886 (0.37)	18,249 (2.33)	8,188 (1.04)	79,619 (10.15)

숙박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기타개인 서비스업
6,710 (0.86)	7,551 (0.96)	667 (0.09)	7,727 (0.98)	7,255 (0.92)	77,914 (9.93)	4,629 (0.59)	354 (0.05)	130,114 (16.58)	6,857 (0.87)	2,774 (0.35)

### ■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17.2월 기준)

광역시	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총계
	96	34	19	13	7	8	8	7	218

도	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122	45	2	19	15	11	7	14	8	1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역분포(참고1)

## 12

## 건강진단결과표(서식) 용어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 ■ 현행규정

- 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1)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또는 (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 문제점

-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강진단결과표에 사업장의 건강진단 현황 중 ‘수진(受診) 근로자’ 항목을 표기하고 있음
  - 그러나 “수진근로자”라는 용어는 그 뜻을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워 법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를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 개정내용

-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강진단결과표의 ‘수진근로자’를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로 개정

#### ■ 기대효과

-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 <개정(안)>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총 근로자 수	계		실시 기간	제1차	-	사업장관리번호	
	남			제2차	-	사업장등록번호	
	여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 생산품:
소재지 : (전화번호 : )	

건강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질병 건수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미 수 검 자		
				받은 근로자						계			일반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무직																					
기타																					

질병 유소견자 현황(다른 면 기재 가능)	구분  질병코드	계			직업경력별						나이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사후 관리 현황	질병별	구분	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	계								
			남								
			여								
		직업병	계								
			남								
			여								
	요관찰자	요관찰자	계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sup>1)</sup>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부서)	성명	성별	나이	근속 연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 <sup>2)</sup>	사후관리 소견 <sup>2)</sup>	업무수행 적합 여부 <sup>2)</sup>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

## 질 병 소 건 코 드 표

	질병 코드	질 병 소 건			질병 코드	질 병 소 건
일반 질병 소건	A	특정 감염성 질환	직업성 질병 소건	유기 화합 물에 의한 중독	207	사염화탄소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208	아세톤
	C	악성신생물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210	이소부틸알코올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F	정신 및 행동장애			212	이황화탄소
	G	신경계의 질환			213	크실렌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214	클로로포름
	I	순환기계의 질환			215	톨루엔
	J	호흡기계의 질환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N	비노생식기계의 질환		금속 에 의 한 중 독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O	임신, 출산 및 산욕			302	망간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303	베릴륨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4	삼산화비소
	R	그 밖에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5	수은
	S	손상			306	연(4알킬연 포함)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307	오산화비나듐
	V	운수사고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309	크롬
	X	고온장애 및 자해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애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산·알 카리· 가스 상태 물질 류에 의한 장애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402	불화수소
직업성 질병 소건	물리 적 인 자 에 의 한 장 해	110	소음성난청		403	시아나화물
		121	광물성 분진		404	이황산가스
		122	면 분진		405	암모니아
		123	석면 분진		406	염소화비페닐
		124	용접 분진		407	염소
		129	그 밖의 분진		408	염화비닐
		130	진동장애		409	염화수소
		141	고기압		410	일산화탄소
		142	저기압		411	질산
		151	전리방사선		412	콜타르
	유기 화합 물 에 의 한 중 독	152	자외선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53	적외선		414	페놀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415	포름알데히드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416	포스겐
		201	노말렉산		417	황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418	황화수소
		203	메틸부틸케톤		499	그 밖의 산·알카리·가스상태류에 의한 장애
		204	메틸에틸케톤	코크스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206	벤젠	그 밖의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2)서식]

##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총 근로 자 수	계			실시기간	-	사업장관리번호		
	남				-		사업자등록번호	
	여				-			업종코드번호
						주요생산품 :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질병 (야간작업)		일반질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건강 진단 현황	계	건 수																			
		실인원																			
	아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알칼리·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유소견자 현황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구분	계	근로 금지 제한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그 밖의 사항
조치 현황	질병유소견자	남						
		여						
	직업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 (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직업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 (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작성일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질병 유소건자 현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 유소건자	계	남	여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소계																				
	A	특정 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애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그 밖에 증상·진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증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X	고온장애 및 화재																			
	Y	기해·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외상·중독·기타 질병 유소건자	소계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 분진																			
	122	먼 분진																			
	123	석면 분진																			
	124	용접 분진																			
	129	그 밖의 분진																			
	130	진동장애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시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201	노말렉산																			
	202	N,N-디메틸포름아이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젠																			
	207	시멘트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티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클다르																			
	222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0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산·알·기 질병 유소건자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비나이드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애																			
	402	불화수소																			
	403	시아화물																			
	404	이황신가스																			
	407	염소																			
기타 질병 유소건자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그 밖의 산·알칼리·가스상태류에 의한 장애																			
	500	휘발성 클타르피치(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501	베릴륨																			
그 밖의	502	염화비닐																			
	599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애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제3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sup>1)</sup>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성명	성별	나이	근속 연수	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 <sup>2)</sup>	건강 구분	검진 소견 <sup>3)</sup>	사후관리 소견 <sup>3)</sup>	업무수행 적합 여부 <sup>3)</sup>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 13

##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시행규칙 제108조 관련, 별표 14의 2)

### ■ 현행규정

- 고용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함(법 제44조)
- 발급 대상은 벤지딘, 베릴륨, 석면 등을 취급하는 업무 등 14개의 업무에 정해진 기간(3개월에서 10년) 동안 종사한 근로자이며(시행규칙 별표 제14의2)
  - 수첩소지자는 업무전환 또는 이·퇴직 등으로 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년 1회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16년))

니켈	벤젠	벤조트 리클로 라이드	벤지딘 염산염	분진	석면	염화 비닐	제철용 코우크스	카드뮴	크롬산, 중크롬산	합계
398	1,009	14	229	322	1,613	407	879	14	2,085	6,970

\* 베타-나프틸아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베릴륨은 발급자 없음

### ■ 문제점

- 현재 14개인 건강관리수첩 대상 유해인자 외에 직업성 암 발생률 및 비교 위험도가 높아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에서 논의한 결과, 업무특성상 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파괴 검사업무(X-선)”을 발급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침

\*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유해요인 확대에 관한 연구('14, 공단연구원)

\*\* 학계, 원자력의학원, 비파괴검사협회 및 공단 등과 회의('16.8.18)

- 비파괴 검사업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므로 **방사선 차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사선(X-선) 노출이력관리가 **소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며

\* 비파괴 검사업무 종사자 현황 : ('10) 5,852명 → ('11) 6,075명 → ('12) 6,792명 → ('13) 7,166명 → ('14) 7,530명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결과에 따르면, 비파괴검사업 종사자(연간 평균선량 2.37mSv('14))가 다른 직종(의료기관, 발전소 등 연간 평균선량 0.58mSv이하('1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선량기준 :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일반인) 연간 1mSv

- 방사선(X-선)에 일정기간이상 노출될 경우 향후 **백혈병 등 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Group 1로 분류) 이·퇴직 후에도 관리가 필요함

\* '10~'15년간 비파괴검사 작업자 6명이 백혈병 등으로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음

#### ■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표14의2)

-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비파괴 검사(X-선) 업무”를 추가

- (발급요건) 비파괴 검사업무의 특성상 ‘근무기준’과 ‘선량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급

- (근무기준) 1년이상 종사자(X-ray non-destructive test)
- (선량기준) 연간 누적선량이 20mSv이상

\* 1년미만 종사자라 하더라도 피폭사고 등을 당한 경우에는 1년 누적선량 기준 20mSv이상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량기준을 마련

## ■ 기대효과

- 비파괴 검사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동 업무 종사자들이 이·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방사선에 의한 질병 조기 발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제108조 관련)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제108조 관련)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 요건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 요건
1~14	(생 략)		1~14	(현행과 같음)	
15	<신 설>		15	비파괴 검사(X-선)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 적 선 량 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14

### 행정처분기준 강화 (시행규칙 별표 20)

#### ■ 현행규정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 20)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 특히, ▲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지정취소를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기관에 따라 업무정지를 1, 2, 3개월로 규정하거나 2, 3, 6개월 또는 1, 3, 6개월 규정하고 있음

#### ■ 문제점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로 처분 기준이 매우 낮음
- 아울러,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묶어 그 적용상에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움

#### ■ 개정내용

- 안전인증기관 등 주요 재해예방기관\*\*에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분리하여 각각 규정하면서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상향하고,

\* (현행)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지정취소

\*\* ▲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거짓 작성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지정취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미보존과 거짓작성 구분없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로 규정된 현행 규정 유지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로 위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기준을 통일

\* ▲ 안전관리대행기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 지정측정기관, 유해·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 다만,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생 개인의 출석 관리나 수료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할 수 있어

- 1차 위반시 현행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2차 위반시 “지정 취소”로 상향

\* (현행) 업무정지 3개월-6개월-지정취소 → (개정안)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 유해·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 ■ 기대효과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취소로 상향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처리 시 관련 서류 등의 허위 작성을 방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신뢰도 향상

●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차별화하여 혼란 방지

##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 2 관련)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 2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제4항 관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15조의2제4항 관련)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신 설〉				마)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나.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목7)다)는 제외한다.				나.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목7)다)는 제외한다.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의 2제3항 관련)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의 2제3항 관련)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신 설〉				마)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법 제32조의 3 관련)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법 제32조의 3 관련)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마. 건설업기초교육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마. 건설업기초교육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6)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 (법 제32조의3 관련)			
6) 직무교육에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안전인증기관(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안전검사기관(법 제36조제10항 관련)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하.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법 제38조 제5항 관련)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신 설〉			
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너. 석면해체·제거업자(법 제38조의4제 6항 관련)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더.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수치를 조작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바.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 (법 제32조의3 관련)			
6) 직무교육에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아. 안전인증기관(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자. 안전검사기관(법 제36조제10항 관련)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하.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법 제38조 제5항 관련)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바)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 취소		
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너. 석면해체·제거업자(법 제38조의4 제6항 관련)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 취소		
더.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나) 측정 대상 항목을 빠트린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u>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u>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b>러.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b>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지정 취소		
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b>머. 유해·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b>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u>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u>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신 설 〉			
<b>버.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b>			
6)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u>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u>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b>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법 제52조의15 관련)</b>			
7)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u>않은</u>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b>러.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b>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b>머. 유해·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b>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u>않은</u>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b>버.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b>			
6)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u>않은</u>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b>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법 제52조의15 관련)</b>			
7)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 취소		

## 15

##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

(시행규칙 별표10, 별표10의3, 별표12)

## ■ 현행 규정

-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지정 검사기관 등 인력기준에서 제외
- \* 안전인증기관, 종합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은 개정안과 같이 “대학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독학사 등을 자격 요건으로 인정

## ■ 문제점

- 현행 법령의 학력요건과 관련하여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도 실제 취업현장에서 정규대학 학위와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결과 초래

## ■ 개정내용(시행령 별표 6)

- 법령의 학력요건을 ‘대학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한 경우
-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취업현장에서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대효과

- 취업과 관련한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 해소

###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6] <개정 2017. 10. 17.>

####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7. 삭제 <2017. 10. 17.>

[별표 10] 〈개정 2017.10.19〉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5조 관련)**

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장비기준
1	공통사항	(생략)	(생략)
2	종합지정 검사기관	<p>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p> <p>가. (생략)</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 바. (생략)</p>	(생략)

[별표 10의3] 〈개정 2017.10.19〉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0조의3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 3. (생략)

[별표 12] 〈개정 2017.10.19.〉

####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생략)



나. ~ 다. (생략)

##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 가. 인력기준

-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 다. (생략)

[별표 14] 〈개정 2017.10.19.〉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02조 관련)

####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 4. (생략)

## 16

##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시행규칙 제136조의5 및 제145조제3항)

## ■ 현행규정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법 제52조의3, 시행령 제33조의13제1항)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함(법 제6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5조제1항)
- 공단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136조의5제3항)
  1. 수수료 과오납 : 과오납 금액 전부
  2. 공단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수수료의 전부
  3. 접수기간 내에 취소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 : 수수료의 전부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수료는 현금 외에도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45조제2항)

## ■ 문제점

- 현재 공단은 LG U+와의 수험원서 전자결제 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응시 수수료 결제 1건당 388원의 정보이용료를 응시자 대신 납부하고 있으므로
  - 시험 접수를 한 후에도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에 따른 손실이 발생

## ■ 개정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을** 법제처 권고기준(100%, 60%, 50% 3단계)\*에 따라 개정

\* 대학수능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 검토 지시('11.9.14.국무회의) → 법제처 권고 기준(100%, 60%, 50% 3단계)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 ■ 기대효과

-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합리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도모

##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제13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한 지도사시험 부터 적용한다.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② (생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p>1. ~ 3. (생 략)</p> <p>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 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 료의 <u>전부</u></p> <p>5. <u>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u> 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 료의 100분의 50</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100분의 60</u></p> <p>5. <u>시험시행일 19일 전</u>----- ----- ----- -----</p>
--	--

17

##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9조의2, 제76조의3, 제80조의3, 제126조의2)

### ■ 개정이유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 그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법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6항, 제38조의2제6항, 제49조제3항)
- 아울러, 고용부장관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비영리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할 필요

### ■ 개정내용

- **(평가기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①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그에 대한 관리 능력 ②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 ③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등을 평가
- **(평가방법)**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평가
- **(평가결과의 공개)**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평가대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근거 마련
- 그 외, 평가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으로 정함

## ■ 기대효과

-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장에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수요자(사업장)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장의 만족도 제고 및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기대

## ■ 시행시기(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7. 10. 19)

## ■ 신·구조문 대비표

###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u>법 제36조의2제7항</u>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u>법 제36조의2제8항</u>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u>법 제38조의2제6항</u> 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u>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u> ----- ----- ----- ----- -----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8항-----  
-----  
-----  
-----  
-----.

1. ~ 8. (현행과 같음)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  
-----  
----- 제1호의2, 제2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③ (생략)	-----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8호-----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5 (생략)

<신설>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6항-----  
-----  
-----  
-----  
-----  
-----.

제15조의6 (현행 제15조의5와 같음)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제19조의2 (생략)

## &lt;신설&gt;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  
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  
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  
15조의5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  
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19조의3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지  
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  
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  
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5제  
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  
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80조의5·제80조의6 (생략)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생략)

제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6·제80조의7 (현행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과 같음)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현행 제80조의7과 같음)

<p><u>제80조의8 ~ 제80조의12</u> (생략)</p> <p><u>&lt;신설&gt;</u></p> <p>[별표 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p>	<p><u>제80조의9 ~ 제80조의13</u> (현행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2까지와 같음)</p> <p><u>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u></li> <li><u>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u></li> <li><u>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u></li> </ol> <p><u>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u></p> <p>[별표 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6 관련)</p>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7.10.19〉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탁 사업장	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전화	대표자		생산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생산직		사무직
남			남	
여			여	
전문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담당요원명			
업무 내용	[ ]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근무일	주		요일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15조의6 에 따라 위와 같이 [ ] 안전 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 ] 제19조의3 [ ] 보건 [ ] 영 제13조 에 따른 [ ] 안전관리자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 ] 안전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 ] 영 제17조 에 따른 [ ]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 담당자 및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 명칭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17.10.19>

석면해체·제거업 [ ]등록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등록증

업 자 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	※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lt;개정 2017.10.19&gt;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호	처리기간	7 일
[ ] 건축물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 ] 설비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 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부피(㎡)·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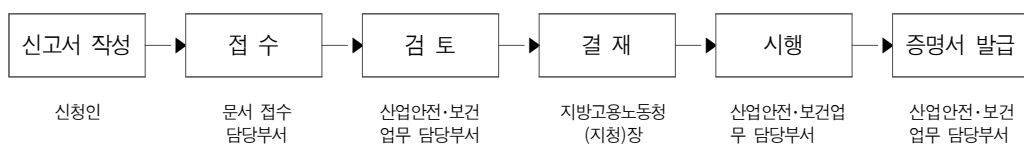
#### 유의사항

-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된 인력 중 실제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7.10.19〉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 변경시 즉시)
------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작업명)

소재지

석면해체·제거업자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발생일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향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개정 2017.10.19>

### 석면해체·제거작업 [ ]신고[ ]변경 증명서

신고작업	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 작업명)
	소재지	전화번호
	작업기간	
신고인	석면해체·제거업자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내용(변경신고 증명서 발급인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10.19〉

##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	현장명(공사명·작업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인	석면해체·제거업자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해체·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개정 2017.10.19>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작업명)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cm³)	초과여부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석면해체·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제3편

#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206호 (2017. 12. 28. 공포·시행)





# 1

##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일괄 정비

### ■ 현행규정

-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에서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 등, 제3절 작업방법 등, 제4절 관리 등

#### (1) 통칙(정의)

-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함(제522조제3호)
-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 출입할 때 가압 또는 감압을 받은 장소를 말함(제522조제4호)

#### (2) 설비 등

-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 공기량 조절을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 저장을 위한 **예비공기조**를 설치하여야 함(제530조제1항)

#### (3) 작업방법 등

- **사고로** 인하여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함(제538조)
- **호흡용 공기통을 휴대하는 방식**은 잠수작업자에게 **급기능력과 상태**를 알려야 하며, **감시하는 사람**을 두어야 함(제545조)
  -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제546조), **감시인**을 배치토록 하며, **감시인의 업무내용**을 규정함(제547조)

#### (4) 관리 등

-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방식에 따라 공기압축기, 수압펌프, 수중압력계, 산소 발생기 등의 점검 기준을 규정(제552조)

#### ■ 문제점

##### (1) 부적정한 용어 사용

- 다른 법령, 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괴리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

\* 호흡용 공기(제522조), 구명조끼(제548조) 등

- **호흡용 공기(제522조)** : 잠수수심, 잠수시간 등에 따라 잠수작업자는 공기(자연 공기) 또는 혼합기체(헬륨 등의 각종 가스를 원료로 혼합·제조한 기체)를 사용하므로 각각의 잠수작업을 포괄하기에 부적절한 용어
- **구명조끼(제548조)** : 부력조절기는 필요시 공기주머니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정하는 잠수장비로 통상적인 구명조끼와는 상이

##### (2) 잠수장비·인력 기준 및 잠수작업 시 안전조치 규정 미흡

- 잠수방법\*에 따라 취해야할 안전조치 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 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곤란

\* 잠수방법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참고1)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 잠수작업자가 호흡할 공기를 수면 위에서 호스를 통해 공급

스쿠버잠수작업 : 잠수작업자가 호흡할 공기를 담은 공기통을 직접 휴대

- (잠수장비 등) 잠수작업 중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잠수인원,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 미비

\* 선진국은 잠수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잠수방법과 잠수작업 환경에 따라 잠수장비, 잠수인원 등을 규정하나,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 미비

- (잠수신호기) 잠수작업 장소에 선박이 지나가 잠수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 장소에 신호기를 게양할 필요

## (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 **(잠수기록)** 사고 시 적절한 처치를 하려면 잠수작업자가 어떤 상황에서 잠수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규정 미비
- **(감압상황 기록)** 잠수작업자 치료시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압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함에도 관련 규정 미비
  - \* 감압 : 잠수작업자가 수면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압력이 급속히 낮아져 발생하는 잠수 병 등을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천천히 압력을 낮추는 행위
- **(재감압)** 현행 규칙은 사고발생 시 기압조절실로 이동시키거나, 해당 잠수 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 천천히 감압하도록 규정
  - \* 기압조절실 :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가압 또는 감압을 받도록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 그러나 사고 작업자를 수중에서 재감압하는 것은 의식불명, 질식, 저체온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필요
  - \* 기압조절실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나, 우리나라는 기업조절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전면금지할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
- **(고농도 산소)** 장시간 또는 높은 압력 하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면 호흡기 염증, 신경계통 문제 등 산소독성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 현행 규칙은 사고 작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치유 등을 위하여 수중감압을 하는 경우에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부재
  - \* 규칙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애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개정내용

## (1) 부정적인 용어 변경

- 일본식 용어를 수정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 “압력조정기” → “압력조절기”로 함(안 제531조)

\* 국가기술자격(잠수산업기사) 출제기준 및 해군 잠수교범과 동일하게 변경

● “급기능력” → “충전상태”로 함(안 제545조)

\*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변경

● “구명조끼” → “부력조절기”로 함(안 제548조)

\* 국가기술자격(잠수산업기사) 출제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화

● “이상기압” → “고기압”으로 함(안 제522조)

\* 이상기압(정상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기압)과 고기압(정상기압 보다 높은 기압)은 다른 개념으로 현재 규칙은 고기압 하에서의 작업만 규정

● “호흡용 공기” → “호흡용 기체”<sup>1)</sup>로 함(안 제522조 등)

\* 공기를 사용하는 잠수작업과 혼합기체를 사용하는 잠수작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

●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한국산업표준” → “단체표준”으로 함(안 제525조)

\* 산업표준심의회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된 후 단체표준으로 제정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스쿠버압축 공기기준’을 한국표준정보방에 등록

(2) 정의규정 정비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활용하여 잠수작업 정의규정도 변경(안 제522조)

1) 기체란 물질이 나타내는 상태의 하나, 공기 수소, 산소 등을 말하며, 공기란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하층부를 구성하는 무색, 무취의 투명한 기체, 산소와 질소가 약 1대4의 비율로 혼합된 것을 주성분으로 하며, 그 밖에 소량의 아르곤, 헬륨 따위의 불활성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음.

-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으로 함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8과 동일하게 개정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으로 함(신설)

나. “**스쿠버 잠수작업**”은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으로 함(신설)

- 기타 정의규정 정비(안 제522조)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와 동일하게 개정

- “**고압작업**”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으로 함

- “**기압조절실**”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 “**비상기체통**”은 “주된 기체 공급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 장치”로 함(신설)

- 변경된 정의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개정(안 제525조, 제530조, 제531조,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548조, 제552조)

### (3) 잠수장비 기준 및 잠수작업시 안전조치 강화

- (스쿠버) 실내 잠수작업 이외의 잠수작업의 경우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안 제545조제2항),

\* 주된 공기공급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잠수작업자가 휴대하는 비상용 공기통

\*\* (영국보건안전청) 모든 잠수작업, (미국 직업안전위생국) 모든 잠수작업

-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잠수 및 감시인 배치 의무화(안 제545조제1항)

- 비상기체통을 지급받은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당 잠수작업 특성상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인근에 두도록 규정(안 제545조제5항)

- (표면공급식) 사고 위험이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과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안 제547조)

\* ①18m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②수면으로 부상하는 데 제한이 있는 잠수작업, ③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

\*\* (영국보건안전청) 모든 잠수작업, (미해군 잠수매뉴얼) 수심 18m 이상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잠수작업, (미국 직업안전위생국) 수심이 30m 이상이거나 수면 상승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비감압한계를 넘는 잠수작업에서 비상기체통 제공 의무화

-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자와 감시인이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제공 의무화(안 제547조제2항)
- 비상기체통을 지급받은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당 잠수작업 특성상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인근에 두도록 규정(안 제547조제5항)

- (잠수신호기 계양) 잠수작업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 제5항 2호의 신호기\*를 표시 할 것을 규정(안 제548조)

\* 국제해사기구 A기 : 선박에 잠수 중인 자가 있으니 타선박은 저속으로 회피하라는 신호

- (설비의 점검 등) 개정안에서 새롭게 규율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대상 확대하고,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 (안 제552조, 제553조)

#### (4)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 (잠수기록의 작성·보존)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의 잠수기록표\*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 잠수작업 참여자, 일자, 시간, 장소, 수중환경, 잠수방법, 작업내용, 잠수수심, 체류시간 등

- 잠수작업자의 감압상황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안 제536조의 2)

- (부상의 특례 등)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 잠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조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538조)

- (고농도 산소) 고농도 산소 사용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고농도 산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546조)

\* 미해군 잠수매뉴얼에서는 수중감압시 100%의 산소를 9m 이상의 수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사용한 후 5분간 휴식하도록 규정

\*\* 일본은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호흡용 기체의 산소 분압(전체 기체의 압력 중 산소의 압력)을 18~220 kPa의 범위에서 유지할 것을 규정

- (기압조절실) 기압조절실 관련 조항에 잠수작업자 추가(안 제532조, 제533조, 제535조)

#### ■ 기대효과

- 선진국 안전 수준달성으로 잠수작업 관련사고 예방

#### ■ 시행시기

- (시행시기) 제536조의2, 제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22조(정의) ----- -----.
1. “ <u>이상기압</u> ”이란 압력이 <u>제공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u> 을 말한다.	<삭 제>
2. “ <u>고압작업</u> ”이란 <u>이상기압</u> 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 <u>고기압(압력이 제공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공기 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 출입할 때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생략)  
<신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작업실의 공기의 부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피가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527조(압력계) ① ~ ⑤ (생략)

⑥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0조(공기조)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 고압작업자 1명-----  
-----.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

----- 잠수작업자-----  
-----  
-----  
-----  
-----.

② -----  
-----  
-----

단체표준-----  
-----.

제527조(압력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압축기체-----  
-----.

제530조(공기조) ① -----

-----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  
-----  
-----  
-----  
-----.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공기조 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공기조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V=60(0.3D+4)/P$$

V : 공기조의 내용적(단위 : 리터)  
D : 최고 잠수심도(단위 : 미터)  
P : 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 : 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제531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2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

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

1. 예비공기조등 ---- 기체압력-----  
-----.
2. 예비공기조등-----  
-----  
-----

-----  
-- : 예비공기조등-----  
-- : -----  
-- : 예비공기조등 ---- 기체압력-----

제531조(압력조절기) ----- 기체압력-----  
----- 기체통의 기체-----  
-----  
압력조절기-----  
-----.

제532조(가압의 속도) -----

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533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압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 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3조(감압의 속도) -----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압작업자-----

---- 고압작업자-----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1. (현행과 같음)

2. -----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p>할 것</p> <p>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u>고압작업자</u>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p> <p>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u>고압작업자</u>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그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u>고압작업자</u>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생략)</p> <p>② 사업주는 해당 <u>고압작업자</u>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u>고압작업자</u>의 성명과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u>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p> <p>3. ----- ----- <u>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u>----- -----</p> <p>② ----- <u>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u>----- -- ----- <u>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u>----- --.</p> <p>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작성하여 3년간</u> ----- -----.</p> <p>제536조의2(<u>잠수기록의 작성·보존</u>) <u>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p> <p>1. <u>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u> <u>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u></p>
--	---

- 나. 잠수작업자
- 다. 감시인
- 라. 대기 잠수작업자
-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 2.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그 잠수작업자를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 즉시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沈下)에 따른 고압실 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제544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5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에게 해당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給氣能力)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할 것

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  
-----  
----- 고압작업자  
-----  
-----.

제544조(송기량)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  
-----  
-----  
-----.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  
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  
 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  
 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  
 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  
 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  
 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  
 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  
 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  
 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  
 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  
 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  
 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 잠수작업자-----  
 -----  
 -----.  
 -----



대한 신체상의 장애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7조(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콧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  
----- 치유하거나 감압하기 --  
--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콧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잠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  
직전에 해당 잠수작업자의 헬  
멧이 본체에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  
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  
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  
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3.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  
가 필요한 잠수작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  
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  
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  
(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  
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  
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④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  
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받  
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  
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  
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

## 제5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

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계양) 사업주

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압축 공기통을 지니고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수중 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만 해당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 송기관, 신호밧줄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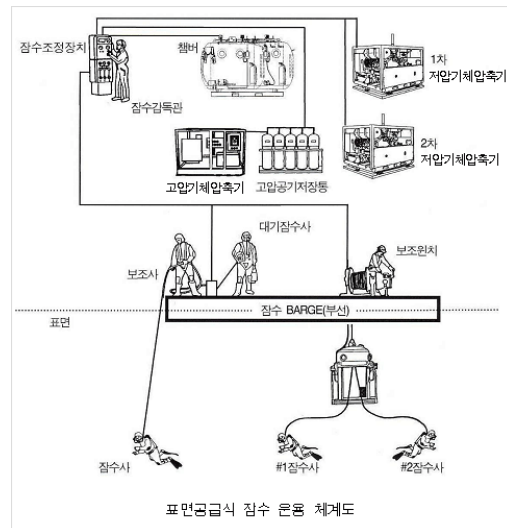
<p><u>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u>  <u>가. 공기압축기나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u>  <u>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u>  <u>다.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u></p> <p><u>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u>  <u>가.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u>  <u>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u>  <u>다. 산소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u></p> <p>③ (생략)</p> <p>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5년간 기록·보존</u>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u>야 한다.</u></p> <p><u>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u>  <u>2. 수중압력계 : 매월 1회 이상</u>  <u>3. 수중시계 : 3개월에 1회 이상</u>  <u>4. 산소발생기 : 6개월에 1회 이상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  -----  ----- 기록하여 3년간 보존-----.</p> <p>1. ~ 6. (현행과 같음)</p>
--	---

## 참고1 잠수작업 개요

-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에게 호흡할 공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

### 1]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 잠수작업자가 호흡할 공기를 수면 위에서 호스를 통해 공급



### 2] 스쿠버 잠수작업

- 호흡할 공기를 담은 공기통을 잠수작업자가 직접 휴대



## 참고2 잠수작업 관련 장비

## ① 잠수용 호흡기

후카(Hookah)	잠수마스크①
	
잠수마스크②	잠수헬멧
	

	후카	잠수마스크·잠수헬멧
비용	20만원	280만원~1,000만원
마스크와 호흡기	분리	일체
머리보호 장치	없음	있음
통화장치	없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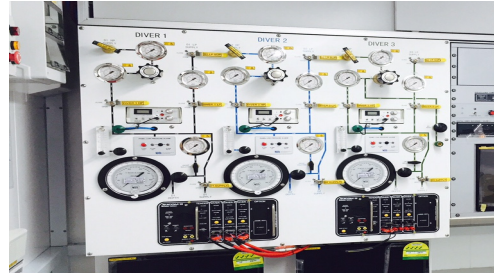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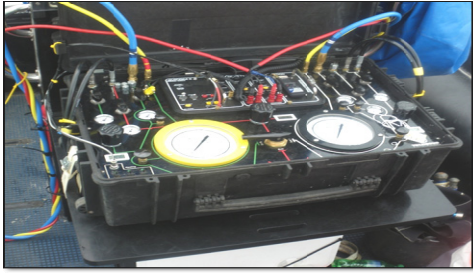
## ② 공기조, 비상기체통

- (공기조) 공기공급원에서 생기는 호흡용 공기를 저장하는 용기로,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가 급격하게 차단되는 것을 방지
- (비상기체통) 주된 호흡용 공기 공급 장치가 손상되는 등의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잠수작업자가 휴대하는 호흡용 공기 저장용기

공기조	비상기체통	
	표면공급식	스쿠버
		

### ③ 잠수조정장치

- 표면공급식 잠수에서 호흡용 기체 공급, 수심측정, 비상기체 공급 등을 제어하여 잠수작업자가 호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설치형	휴대형
	

### ④ 압력조절기

- 잠수작업자가 잠수 중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적절한 압력의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장치

표면공급식	스쿠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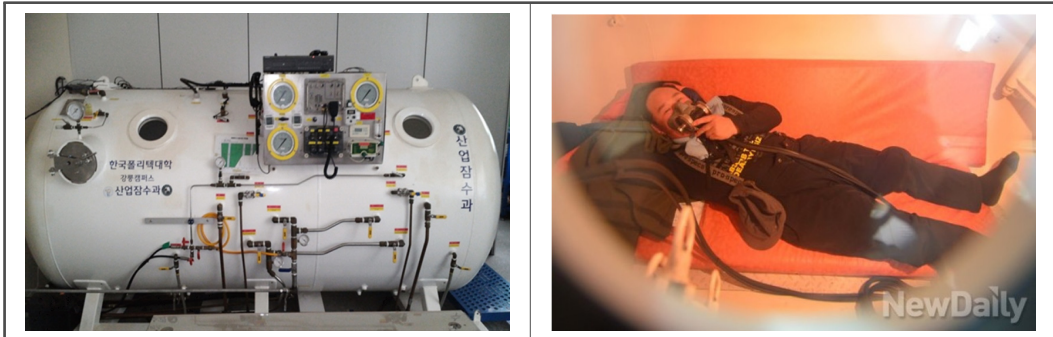
## ⑤ 부력조절기

- 어깨끈, 허리띠, 공기주머니가 결합된 장치로, 기체를 공기주머니에 넣으면 부력이 증가하여 잠수작업자가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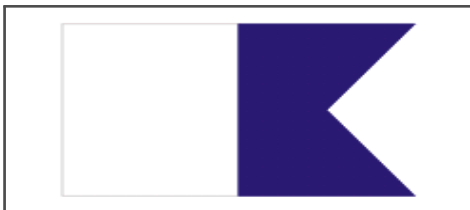
## ⑥ 기압조절실

-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가압 또는 감압을 받도록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 ⑦ A기

-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항해시 안전을 위해 정한 신호규약 중 하나로 선박에 잠수 중인 자가 있으니 타선박은 저속으로 회피하라는 의미



### 참고3 잠수작업 재해현황 및 주요 사고 사례

#### ① 산업 잠수작업자 현황

- 산업잠수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략 1,100명~1,400여명으로 추정\*

\* 잠수작업 실태조사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15)

#### ② 산업재해 현황

- 잠수작업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약 40%는 사망사고('05~'14)

[잠수작업 중 산업재해 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재해 건수	4	7	5	7	3	4	3	4	5	14	56
사망	2	3	1	2	0	2	1	1	3	4	19
업무상 질병	2	4	4	5	3	2	2	3	2	1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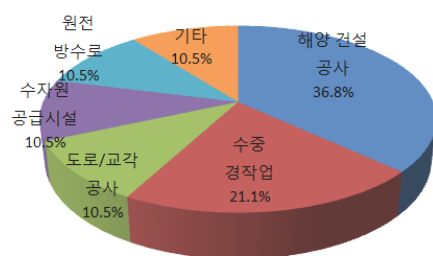
-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해양건설공사(7명), 수중 경작업(4명), 도로·교각 공사(2명), 수자원 공급시설(2명), 원전방수로(2명) 순

\* 해양건설공사(방파제, 항구, 부두, 선착장, 배관 공사)  
수중경작업(촬영, 샘플링, 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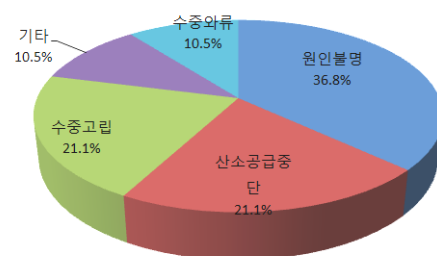
- 발생원인은 원인불명\*(7명), 산소공급중단(4명), 수중고립(4명), 회오리 형태 등의 수중와류(2명) 순

\* 잠수작업시 통신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

[그림-1] 작업별 사망자 현황



[그림-2] 재해원인별 사망자 현황



### ③ 주요 사망사고 원인 (안전보건공단, '03~'16)

	사 례	추정 재해원인	예방대책
1	원인불명의 의식상실	호흡기 탈락 (후카 사용)	전면마스크 잠수헬멧 착용, 통신장비 구비
2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호흡기가 탈락		
3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의식상실로 호흡기 탈락		
4	원인불명의 호흡기 탈락		
5	강풍으로 인해 정박한 선박이 회전하여 선체 아래에 하강 조류가 발생하여 조류에 휩쓸려 잠수자의 호흡기가 입에서 탈락		
6	저장된 공기가 매우 적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하던 도중 공기가 고갈되어 익사	호흡용 기체 고갈	비상기체통 착용
7	공기 잔량을 파악하지 않고 스쿠버 촬영을 하던 도중 공기량이 줄어들자 급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1인은 폐손상으로 인한 동맥기체색전증으로, 1인은 수중 구조물에 걸려 호흡기체 고갈로 익사		
8	선박 하부에서 취수구 이물을 제거하던 중 수면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호흡기체 고갈로 사망		
9	전면마스크 호흡기에 공기가 지속적으로 과다 공급되는 현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호흡 불가	설비불량, 호흡용 기체 공급차단	비상기체통 착용, 통신장비 구비, 설비 점검 강화
10	전면마스크에 부착된 통신기의 수밀성(물을 막는 능력) 저하로 해수가 유입되어 호흡 불가		
11	원인불명의 호흡용 기체 공급 중단으로 부상을 시도하던 중 사망		
12	호흡기체를 공급하던 호스가 파손되어 호흡 불가		
13	원인불명의 호흡기체 공급중단으로 수중에서 탈출시도 중 사망		
14	심혈관질환 보유	심장병변	—

## 참고4 잠수작업 시 사고와 관련한 언론 보도

### 가거도서 배 인양 작업하던 30대 잠수부 숨져

2017/02/15

(신안=연합뉴스) 15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앞바다에서 잠수부 A(37)씨가 작업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해저에 가라앉은 바지선을 인양하기 위해 바지선과 연결된 크레인 분리작업을 위해 잠수를 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잠수한 지 10여 분이 지나도 물 위로 나오지 않자 수색에 나선 동료 잠수부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지상으로 옮겨진 A씨는 가거도보건소 직원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A씨가 작업한 바지선(1천950t)은 지난해 말 해저 천공작업 중 한쪽으로 기울면서 침수됐다. 해경은 작업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여수 해상서 수중 작업하던 50대 잠수사 숨져

2016/12/28

(여수=뉴스) 전남 여수 바다 속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잠수사가 숨져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여주시 낙포 예인선부두 앞 해상에서 잠수사 박모(57)씨가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는 예인선 점검을 위해 이날 오전 동료 잠수사와 함께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박씨가 예인선의 스쿠루에 몸이 끼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잠수 작업을 할 때 안정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부산서 선박수리 작업하던 잠수사 실종

2014/8/28

(부산=연합뉴스) 27일 오후 7시 25분께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에 있는 한 수리조선소에서 작업하던 잠수사 김모(55)씨가 실종됐다.

수리조선소 직원은 선박의 파손 부위를 막으려고 김씨 등 잠수부 2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김씨의 작업 불빛이 보이지 않아 수중수색을 해 김씨를 발견, 인양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놓치는 바람에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부산해경은 경비정, 구조정과 122구조대를 보내 28일 새벽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김씨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28일 오전 122구조대와 경비정을 동원, 119구조대와 함께 다시 수색작업을 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2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주지방법 구체화

### ■ 현행규정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고(규칙 제658조)
  - 실시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규칙 제661조)
- \* 유해요인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며, 정기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수시조사는 사업장 신설시 1년 이내,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실시

### ■ 문제점

- 구체적인 유해요인 조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전에 실시했던 조사방법을 그대로 답습
  - 작업환경개선과의 연계 미흡으로 근골격계질환자가 연속 발생
- \* 최근 3년간('13년~'15년) 231개소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3명이상 발생
- 또한, 유해성 주지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자가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

### ■ 개정내용 (제658조 및 제661조)

-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따르도록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고시로 규정**
  - 이를 위해 현행규정(제658조)에 위임근거를 마련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7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포함하도록 개정 예정
- ※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되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주지방법을 구체화

☐ 기대효과

-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주지의무 구체화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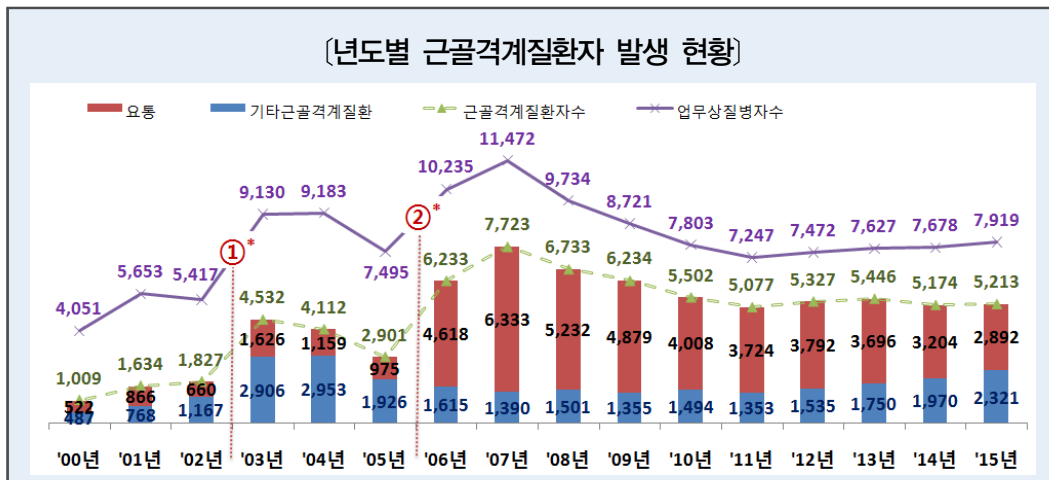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 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 ----- ----- ----- ----- ------. 이 경우 제657조제2항 <u>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u> <u>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u> <u>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u>

<p>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② (생략) <u>&lt;신설&gt;</u></p>	<p>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u></p>
--	--

## 참고 근로격계 관련 자료

### ■ 근로격계질환자 발생 추이

(’11) 5,077명, 70.1% → (’13) 5,446명, 71.4% → (’15) 5,213명, 65.8%



### ■ 제도개선 연혁

- '90년대 후반부터 권고기준(고시 및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격계질환을 예방·관리토록 지도
- '02년부터 근로격계질환이 사회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제5호\*를 신설('02.12.30)하여 사업주에게 근로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부여
  -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보건규칙 개정('03.7.12.)을 통해 근로격계부담작업(11개)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



## 3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기준 신설

■ **현행규정**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규칙 제566조, 제567조)

\* “고열작업”이란 용광로, 가열로, 갱내,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등에서의 작업을 말함(규칙 제559조)

■ **문제점**

- 매년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아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현황]

구분	계	업종별					
		건설업	제조업	농업	운수·창고 및통신업	임업	기타
계	52(10)	27(5)	11(1)	2(1)	1(1)	1(1)	10(1)
재해비율 (사망비율)		51.9% (50.0%)	21.2% (10.0%)	3.8% (10.0%)	1.9% (10.0%)	1.9% (10.0%)	19.2% (10.0%)
2012	13(4)	3(1)	6(1)		1(1)	1(1)	2
2013	26(5)	13(3)	5	2(1)			6(1)
2014	4	4					
2015	5(1)	4(1)					1
2016	4	3					1

※ ( )는 사망자수

- 그러나, 현행 규칙에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휴게시설 설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 여름철 폭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 필요

\*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여름철 열사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

#### ■ 개정내용 (제566조, 제567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상당히 기여

#### ■ 해외사례

- (중국) ‘방서강온(防暑降溫) 조치관리방법’을 통해 고온날씨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감독기관은 작업중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고용업체 및 책임자에게 행·사법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규정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시 조치기준으로서 물, 그늘, 열순응\*, 교육 등을 규정

\* 처음 작업시 작업시간을 줄였다가 일정기간 동안 시간을 늘려가면서 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프랑스) 옥외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Labor code로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실시토록 규정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 -----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생략) <u>&lt;신 설&gt;</u>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4

##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 **현행규정**

-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규칙 제605조제1호)
  - 토석·광물·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25가지 분진작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별표 16**)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국소 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분진작업에 해당되는 실내사업장에 대하여 환기(국소, 전체)장치의 설치, 매일 작업 시작 전 청소, 목욕시설 등 세척시설의 설치 등을 하여야 함(규칙 제607조~제613조, 제615조~제617조 규정)

■ **문제점**

- 최근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건강영향이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며
  - 특히, **장시간 실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
  - 그런데,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황사 및 미세먼지도 분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를 규정할 필요

## ■ 개정내용 (제605조 제1호)

- 안전보건규칙의 분진 정의에 황사·미세먼지 추가하고
  - 분진작업의 종류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추가(별표 16)
  - \*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사업주의 유해성주지(제614조), 호흡용 보호구 지급(제617조) 등의 의무 사항 명확화
  - ※ 환기장치 설치(규칙 제607조~제611조), 사용 전 점검(제612조), 청소의 실시(제613조)는 실내 작업에 대한 규정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615조(세척시설 등)는 옥외작업장 보유 사업주가 목욕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용을 제외
  - \*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일 수가 많지 않고, 옥외 작업장을 보유한 건설업 등은 단기간 작업 또는 작업장소의 이동이 잦아 목욕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 기대효과

- 옥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진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 보호에 기여

##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05조(정의) ----- -----.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	1. -----

<p>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u>물질</u>을 말한다.</p>	<p>----- ----- <u>물질</u>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p>
<p>2.·3. (생 략)</p> <p>제615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u>분진작업</u>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제615조(세척시설 등) ----- ----- <u>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u>-----.</p>

5

##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

### ■ 현행규정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1항)
    - 다만, 대상 제품이 다른 법령에서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함**(법 제34조제3항, 시행규칙 제58조의2)
- \* 예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 문제점

- 가설기자재인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대상 제품에 해당하여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면제됨에도
    - 건설현장 구매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따른 안전인증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 및 비용 낭비
- \*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안전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추락 방호망’은 같은 품목임에도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어 건설현장 및 업계 관계자들의 혼란 가중
- \* KS F 8081(수직보호망), KS F 8082(추락방호망), KS F 8083(낙하물 방지망)

### ■ 개정내용 (제1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6조)

- 안전인증(KCs)과 KS 인증 간 중복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인증(KCs) 대상품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외\*시키고,

-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개정 추진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2016년)

\*\* 고용노동부 고시와 KS규격 비교결과 KS 규격이 방염성 시험추가, 인장강도 기준강화, 테두리 및 달기로프 제조기준 마련되어 있음

-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안전방망” 용어를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추락방호망” 용어로 변경하여 산업현장 혼란 해소

#### ■ 기대효과

- 안전인증에 관한 이중 인증절차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인증 대상품을 조정함으로써 해당업계의 부담완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 각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

#### ■ 시행시기

-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 추락방호망 제조업체의 KS F 8082 성능시험 준비기간 반영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② ----- ----- ----- ----- -----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추락방호망-----  
망-----  
추락방호망-----  
-----  
-----  
-----  
-----

1. 추락방호망-----  
-----  
-----  
-----  
-----  
-----

2. 추락방호망-----  
-----  
-----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생략)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 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

3. -----  
----- 추락방호망의 -----  
-----  
-----  
----- 추락방호망 -----  
-----  
-----.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추락방호망 -----  
----- 추락방호망 -----  
-----  
-----  
-----  
-----.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  
-----

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 추  
락방호망-----

---.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1. ~ 3.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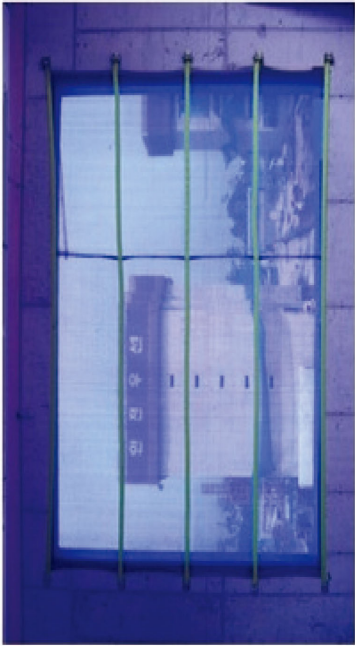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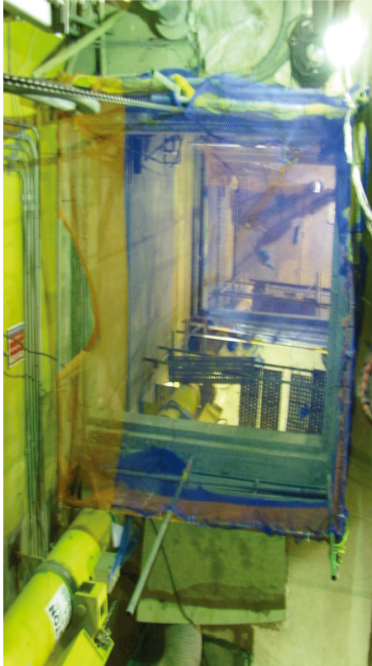

4. -----  
-----.

--- 추락방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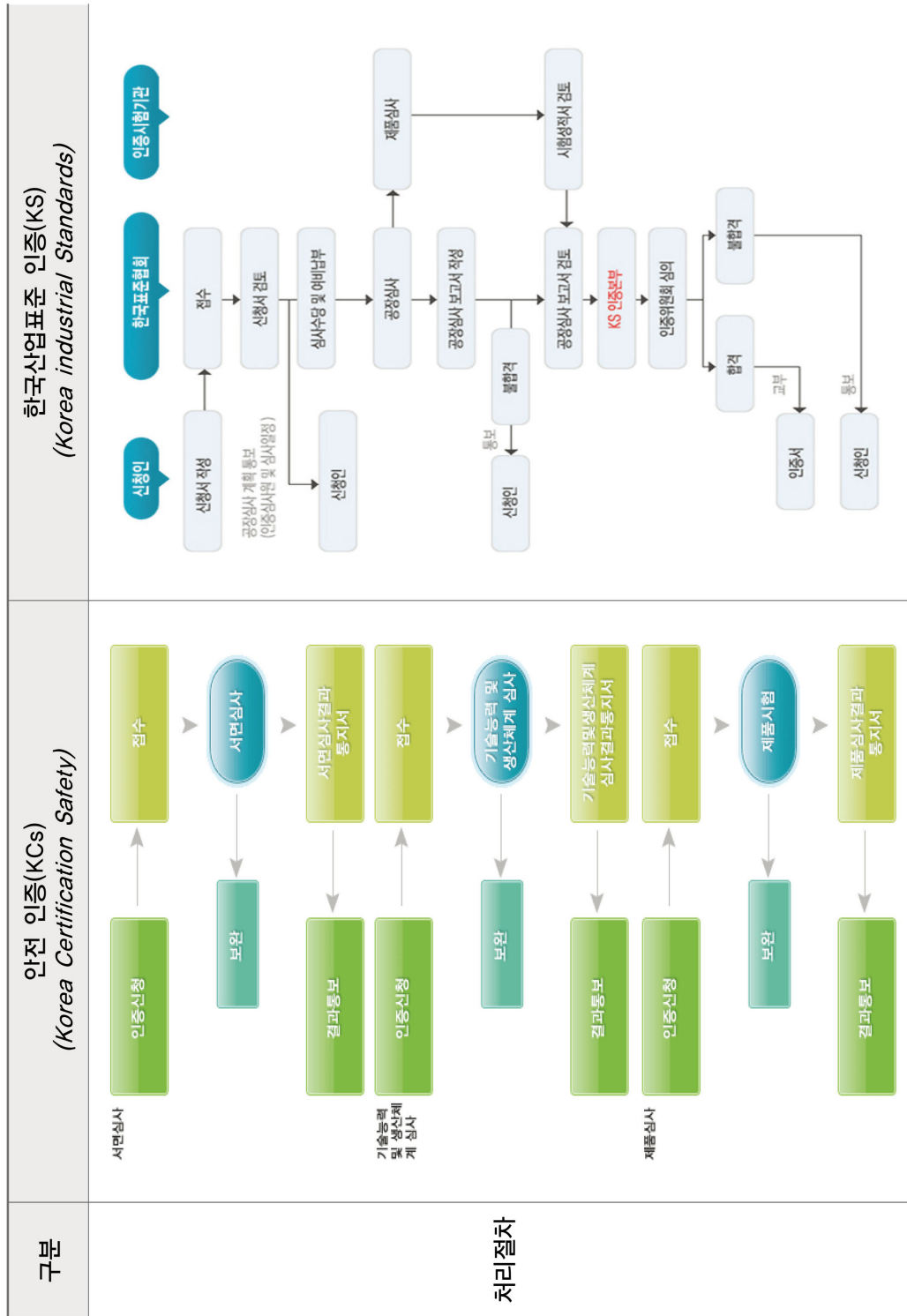
5. ~ 7. (현행과 같음)

## 참고1 각종 방망 정의 및 종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한국산업표준(KS)
<p>제35조(정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8.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이란 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안전방망”이란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다만, 낙하물방지용 방망은 그물코가 20mm 이하이어야 한다.</p> <p>나. “수직보호망”이란 작업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p> <p>다. “수직형 추락방망”이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p>	<p>● KS F 8081(수직보호망) 이 표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 보호망에 대하여 규정한다.</p> <p>● KS F 8082(추락방호망) 이 표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규정한다.</p> <p>● KS F 8083(낙하물 방지망) 이 표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하여 작업자, 통행인 및 통행 차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규정한다.</p>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안전방망 (추락방호망)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	고층건축공사에서 작업 중에 재료,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망

구분	안전 인증(KCs) (Korea Certification Safety)	한국산업표준 인증(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제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li> <li>-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 KCs를 부착하는 제도(09.1.1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li> <li>-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심사하고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 마크를 제품에 표시</li> </ul>
소요비용	서면심사 : 31,000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125,000원 제품심사 : 59,000원(안전방망), 71,000원(수직보호망), 90,000원(수직형 추락방망)	신청비 : 50만원(1분야) 심사 수수료 : 심사일수(2일) * 공장심사비(33만원/1인)
소요기간	- 예비심사(7일), 서면심사(15일), 제품심사(30일)	- 40일(제품시험기간 제외)
사후관리	- 안전인증 후 매년 확인심사	- KS 인증 후 1년마다 제품심사, 3년마다 정기심사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구분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제2016-54호)	한국산업표준(KS F 8082)																																																
성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망사 인장시험<table><tr><th>방망의 종류 및 성능</th><th>매듭 방망</th><th>라셀 방망</th><th>무매듭 방망</th></tr><tr><td>그물코 한 변의 크기</td><td></td><td></td><td></td></tr><tr><td>100 mm</td><td>2 400 N 이상</td><td>2 100 N 이상</td><td>2 200 N 이상</td></tr><tr><td>50 mm</td><td>1 310 N 이상</td><td>1 150 N 이상</td><td>1 100 N 이상</td></tr><tr><td>30 mm</td><td>860 N 이상</td><td>750 N 이상</td><td>710 N 이상</td></tr><tr><td>15 mm</td><td>460 N 이상</td><td>400 N 이상</td><td>380 N 이상</td></tr></table></li><li>테두리로포 및 달기로포 인장하중<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5 000 N 이상</li></ul></li><li>낙추에 의한 시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속도 : 15.0 m/s<sup>2</sup> 이하</li><li>- 현저한 손상 및 관통이 없을 것</li></ul></li></ul>	방망의 종류 및 성능	매듭 방망	라셀 방망	무매듭 방망	그물코 한 변의 크기				100 mm	2 400 N 이상	2 100 N 이상	2 200 N 이상	50 mm	1 310 N 이상	1 150 N 이상	1 100 N 이상	30 mm	860 N 이상	750 N 이상	710 N 이상	15 mm	460 N 이상	400 N 이상	380 N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망사 인장하중<table><tr><th>방망의 종류 및 성능(kN)</th><th>매듭 방망</th><th>무매듭 방망</th><th>라셀 방망</th></tr><tr><td>그물코 한 변의 크기(mm)</td><td></td><td></td><td></td></tr><tr><td>100</td><td>1.96 이상</td><td>2.36 이상</td><td>2.06 이상</td></tr><tr><td>50</td><td>1.08 이상</td><td></td><td>1.13 이상</td></tr><tr><td>30</td><td>-</td><td></td><td>0.74 이상</td></tr><tr><td>15</td><td>-</td><td></td><td>0.40 이상</td></tr></table></li><li>테두리로포 및 달기로포 인장하중<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4.7 kN 이상</li></ul></li><li>낙추에 의한 시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속도(G) : 15.0 이하</li><li>- 현저한 손상 및 관통이 없을 것</li></ul></li></ul>	방망의 종류 및 성능(kN)	매듭 방망	무매듭 방망	라셀 방망	그물코 한 변의 크기(mm)				100	1.96 이상	2.36 이상	2.06 이상	50	1.08 이상		1.13 이상	30	-		0.74 이상	15	-		0.40 이상
	방망의 종류 및 성능	매듭 방망	라셀 방망	무매듭 방망																																														
	그물코 한 변의 크기																																																	
100 mm	2 400 N 이상	2 100 N 이상	2 200 N 이상																																															
50 mm	1 310 N 이상	1 150 N 이상	1 100 N 이상																																															
30 mm	860 N 이상	750 N 이상	710 N 이상																																															
15 mm	460 N 이상	400 N 이상	380 N 이상																																															
방망의 종류 및 성능(kN)	매듭 방망	무매듭 방망	라셀 방망																																															
그물코 한 변의 크기(mm)																																																		
100	1.96 이상	2.36 이상	2.06 이상																																															
50	1.08 이상		1.13 이상																																															
30	-		0.74 이상																																															
15	-		0.40 이상																																															
방염성 성능	시험기준 없음	<table><tr><th rowspan="3">방염성</th><th>잔염 시간</th><th>얇은 포</th><th>3초</th></tr><tr><th>잔진 시간</th><th>두꺼운 포</th><th>5초</th></tr><tr><th>탄화 거리</th><th>얇은 포</th><th>5초</th></tr><tr><td rowspan="2">비고 1 얇은 포는 1㎡의 중량이 450g 이하인 것. 비고 2 두꺼운 포는 1㎡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td><td></td><th>두꺼운 포</th><th>20초</th></tr><tr><td></td><th>두꺼운 포</th><th>20cm</th></tr></table>	방염성	잔염 시간	얇은 포	3초	잔진 시간	두꺼운 포	5초	탄화 거리	얇은 포	5초	비고 1 얇은 포는 1㎡의 중량이 450g 이하인 것. 비고 2 두꺼운 포는 1㎡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		두꺼운 포	20초		두꺼운 포	20cm																															
방염성	잔염 시간	얇은 포		3초																																														
	잔진 시간	두꺼운 포		5초																																														
	탄화 거리	얇은 포	5초																																															
비고 1 얇은 포는 1㎡의 중량이 450g 이하인 것. 비고 2 두꺼운 포는 1㎡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		두꺼운 포	20초																																															
		두꺼운 포	20cm																																															
제조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테두리 로포 및 달기로포의 끝 부분은 풀어지지 않도록 가공</li><li>테두리 로포와 테두리 로포의 연결은 각 테두리 로포의 모든 가닥을 4회 이상 짜 넣어 짧게 꼬아 잇든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에 의한다.</li><li>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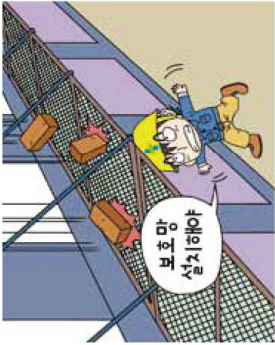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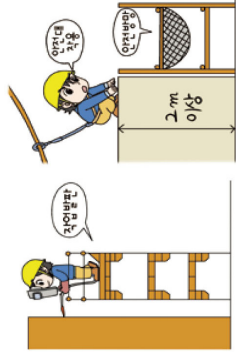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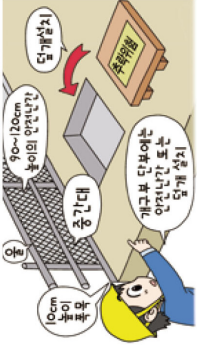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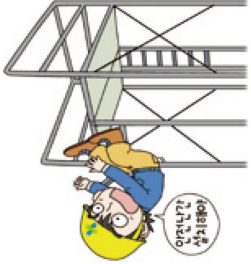
## 참고4 안전규칙 조항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p>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p> <p>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p>	<p>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p>	<p>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성 등으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p>	<p>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p>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p> <p>30도 이하를 유지할 것</p> 	<p>제42조(추락의 방지)</p> <p>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p> <p>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p> <p>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성으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TEL : (044) 202-7690

FAX : (044) 202-8090

---